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기관·부서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 실태 등을 정확히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유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9조부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

2. 감사기간: 2025.11. 4.(화) ~ 11.17.(월) <14일간>

※ 제333회 정례회: 2025.11. 3.(월) ~ 12.23.(월) <51일간>

3. 감사 대상기관

|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9개) | 본회의 의결대상기관(4개) |
|-----------------|----------------|
| ○ 비 상 기 획 관 | |
| ○ 민 생 사 법 경 찰 국 | |
| ○ 행 정 국 |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 ○ 재 무 국 | ○ 서울 장학 재 단 |
| ○ 평 생 교 육 국 |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 ○ 인 재 개 발 원 | |
| ○ 감 사 위 원 회 |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
| ○ 자 치 경 찰 위 원 회 | |

4. 감사위원회 편성

| 구분 | 소속정당 | 위 원 명 | 사 무 보 조 직 원 |
|-------|---------|----------------------------------|--|
| 위 원 장 | 국 민 의 힘 | 장 태 용 | . 수석전문위원 김 태 한 . 의사지원팀장 김 상 원 . 전 문 위 원 정 찬 일 . 주 무 관 배 효 인 . 입 법 조 사 관 최 석 훈 |
| 부위원장 | 국 민 의 힘 | 최 유 희 | . 입 법 조 사 관 최 문 숙 . 입 법 조 사 관 최 현 종 |
| | 더불어민주당 | 박 수 빈 | . 입 법 조 사 관 김 원 진 . 입 법 조 사 관 채 태 준 |
| 위 원 | 국 민 의 힘 | 박 영 한 서 호 연 유 정 인 이 숙 자 | . 주 무 관 손 은 영 . 주 무 관 방 성 애 . 주 무 관 김 경 선 . 정 책 지 원 관 여 양 모 . 정 책 지 원 관 이 슬 기 . 정 책 지 원 관 이 승 후 |
| | 더불어민주당 | 박 강 산 이 승 미 | . 정 책 지 원 관 정 숙 영 . 속기 및 녹취요원 (3명) |

5. 감사일정

| 일 시 | | 감사대상기관 | 장 소 | 비 고 |
|-----------|-------|---|------------------------|-------------|
| 11. 4.(화) | 10:00 | ○ 인재개발원 ○ 비상기획관 | 행정자치 위 원 회 회 의 장 | 관계 증인 출석 |
| 11. 5.(수) | 10:00 | ○ 행정국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 | |
| 11. 6.(목) | 10:00 | 휴 감 | | |
| 11. 7.(금) | 10:00 | ○ 민생사법경찰국 ○ 자치경찰위원회 | | |
| 11.10.(월) | 10:00 | ○ 재무국 | | |
| 11.11.(화) | 10:00 | ○ 평생교육국 ○ 서울장학재단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 |
| 11.12.(수) | 10:00 | ○ 평생교육국 ○ 서울장학재단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 |
| 11.13.(목) | 10:00 | 휴 감 | | |
| 11.14.(금) | 10:00 | ○ 감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 |
| 11.17.(월) | 14:00 | [종 합 감 사] (미진부분 집중감사)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 | |

6. 주요 감사사항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비상기획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재해 군병력 동원 •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등록 관리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위탁교육 관리 • 성과관리계획(BSC) 및 평가업무 • 보도 및 부서 홈페이지 등 홍보 관련 업무 • 상훈, 공무 국외여행 총괄, 보안 총괄 • 서울시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 예비군의 날 행사 등 안보행사 • 민·군 협력 지원 업무 • 국군장병 등 위문 행사 • 민원(고충,인터넷, 트위터), 정보공개 • 급여/수당/ 복리후생비, 후생복지업무, 직원교육 • 감사, 조사, 공직기강, 청렴도 업무 • 문서/기록물관리, 물품관리 • 해외참전용사 자녀 장학금 모금사업 • 통합방위지원 계획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회의 운영, 통합방위 협의회 • 운영 조례, 전·평시 통합방위상황실 운영 • 주민보호대책본부 운영, 예비군 육성 지원, • 공직자 안보교육, 시민 안보의식 함양사업(시 재향군인회) • 시 소관 국가중요시설 관리, 적 침투 취약지역 분석·관리 • 6.25전쟁 상흔 발굴 및 보존사업 •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추진 •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 • 협조구역 내 건축협의(고도 및 거리 제한 등) • 충무시행·실시계획 수립 • 비상대비 자원관리(기술인력 및 물자 동원 등) 업무 • 전시 비축물자 관리 • 정부합동평가 지표 관리(충무계획 실효성 제고) • 비상대비 훈련 총괄(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 서울시 전시종합상황실 구성 및 운영 • Defense Seoul 2030 추진 총괄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비상기획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비 서울시 안보포럼 추진 •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 화재방 방호시설, 전기, 소방 등 - 정보, 통신장비, EMP시설 등 - 국지망, 비상대비연습 정보시스템 등 • 시청 직장 예비군중대 관리 및 운영 • 시청 직장 민방위대 관리 및 운영 • 사회복지요원 관리 및 운영 • 사업소, 자치구 등 사회복지요원 현황 관리 • 전시 병무행정 업무 • 고위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관리 • 병역명문가 조례 관리 • 서울시 민방위계획 수립 • 전시 민방위통제본부 계획 수립 및 운영 •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결과분석 • 민방위 교육강사 선발 및 위촉(연수 추진) • 마곡안전체험관(구.서남권안전교육센터) 지원 •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 민방위 사이버교육 관련 업무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 사업 •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사업 • 민방위대 정기점열 • 민방위 영상 등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훈련 홍보 • 민방위 교육훈련 의무위반 과태료 업무 •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보급확충, 정기점검 •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 민방위대피소 비상용품 비치 • 자치구 민방위대 조직·편성, 지원(여성)민방위대 관리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시/중양) • 여성민방위 경진대회 운영 • 주민 신고망 관리 •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시설 유지 관리 • 시민 생활안전 체험교육 운영, 민방위대원 교육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비상기획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축탁직, 사회복지무원 관리 • 민방위경보 관련 법·규정 및 매뉴얼 정비 • 국가중요시설(민방위경보통제소) 청사방호 및 보안 • 민방공경보 전파체계 개선사업 추진 • 민방위경보통제소 무기·탄약 관리 • 민방위 경보사이렌 노후도 조사 및 교체·이전사업 • 민방위경보사이렌 교체·신설·이설 현장 감독 • 경보음 가청률 및 경보음 미약지역 조사 • 민방위 경보시설 및 경보사이렌 현장점검 • 자치구 경보담당자 교육·훈련 • 경보상황실 경보시스템 도입 및 시스템 운영관리 • 민방위경보통제소 경보상황실 상황근무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민생사법 경 찰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수사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 함양에 관한 사항 • 민생사법경찰국 홍보에 관한 사항 •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디지털수사 지원 및 각종 수사정보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디지털 포렌식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각 지정 지명 분야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대부업 관련 분야 - 불법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할부거래 관련 분야 - 환경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분야 - 상표권 침해·원산지 표시(공산품) 위반 분야 - 부동산 불법행위 분야 - 식품·원산지 표시(농·수산물) 위반 분야 - 사회복지·청소년보호 관련 분야 - 공중위생·동물보호 관련 분야 - 의료·정신시설·의약·화장품·의료기기 분야 -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분야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행 정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년인사회, 시무식·직원조례 개최, 시장단 이·취임식 등에 관한 사항 • 시장공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및 사무공간 재배치에 관한 사항 • 시 자체 행사 및 국경일 등 국가 주요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광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당직, 보안, 청사방호, 공공안전관 관리에 관한 사항 • 다목적홀, 각종 전자안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청사환경, 청소용역 및 폐기물 재활용 관리,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 본관 전시공간 조성 및 전시기획에 관한 사항 • 청사투어 운영 및 프로그램 발굴, 안내데스크 운영에 관한 사항 • 본관 직원식당 및 간담회장, 자판기 등 후생복지시설, 카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소문1청사 구내식당, 다락, 회의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공용차량 관리·운영 및 업무택시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내 시설물 개·보수 등 유지관리 및 청사 공원 및 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인터넷전화, 법인휴대전화, 웹팩스 등 유무선 통신 운영 관리 및 청사 CCTV, 출입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인사관리, 역량평가, 대우공무원 선발·관리,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및 행정직군 임용후보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인사법령 등 제도개선 및 인사관리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명예·조기·정년퇴직, 근속승진, 민간근무휴직에 관한 사항 • 제1·2인사위원회(징계), 공무원 복무관리 및 근무기강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 및 상시기록평가, 가산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행 정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 및 수당, 공무원 연금 업무에 관한 사항 • 개방형 직위 및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에 관한 사항 • 공무직·공공안전관 단체·임금교섭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공무직·공공안전관 인사·복무·징계, 공무직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공무직 직장내괴롭힘 상담 및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 장·단기 국외훈련,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관한 사항 • 장·단기 국내위탁교육, 상시학습제도, 퇴직준비교육, 국내 배낭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 • 후생복지계획 수립, 선택적복지제도 및 후생복지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직장 어린이집, 직원 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연수원, 콘도 및 일반휴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연문화 바우처, 시청매점 및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종합건강검진, 힐링센터 및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부속 의원 관리 및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 • 구청장협의회 및 부구청장 회의 운영, 시·자치구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치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및 배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특별조정교부금 사후관리 및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예산 신속집행, 소비투자 등 행정안전부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및 커뮤니티 공간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행 정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직선거 법령 관련 질의, 유권해석 등에 관한 사항 •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업무 제도 운영 및 전산자료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혁신파크 운영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시 자원봉사 센터,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시 봉사상, 유공자 시민표창,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공유기업 단체 지정, 공유허브 등 공유서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 법정단체 지원, 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과거사 진상 규명에 관한 사항 •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관리,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및 비영리법인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사항 • 지역연계형 청년·중장년 창업 지원사업(넥스트로컬)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상생 추진계획, 지역상생발전위원회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기금심의위원회, 재난·재해 지원 포함)에 관한 사항 • 타 지자체 간 우호교류협약(MOU) 체결에 관한 사항 • 서울-지역 비대면 방과후 학습지원사업(랜선나눔캠퍼스)에 관한 사항 • 서울캠핑장(가족자연체험시설), 서울농장 농촌체험 프로그램,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주요행사 연계 직거래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동행상회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행 정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농부의 시장 및 추석절 농수산물 서울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상생플랫폼 홈페이지 관리 및 지역상생분야 비영리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 조정 및 기획 총괄에 관한 사항 •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 평화통일·안보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거주 이산가족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날 주간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기초물품, 입주청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 및 일자리 지원(취업연계, 근속 장려금, 자격증 등)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및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생활안내서 제작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 홍보, 가족 통합프로그램(동행한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사업 검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위기징후 대상자 관리(위기가구 실태조사 등), 의료지원(건강검진 등) 사업 및 돌봄(가정·긴급) 서비스,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연합 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재 무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제도 개선, 통합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입증지,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 계약제도 개선, 서울계약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 시금고 지정·약정 등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운영 및 시금고시스템 관리 • 세출 및 자금관리 총괄 • 일반·특별회계·기금·세입·세출·외현금 지급 및 반납승인 • 일상경비 교부, 국비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해소, 교환 관련 업무 총괄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 공유재산 관련 법규정비, 제도개선, 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 공유재산 손해보험, 재산 감정평가업자 추천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 행정재산 사용료 및 유·무상 사용허가 자료관리 • 행정재산 활용조치 및 유희재산 활용부서 지정 • 시유재산 위탁관리 및 시유지 집단화 사업 • 체비지 소송 및 소유권 이전 정리 • 시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체납 계획 수립 및 관련 업무 • 시유재산 정기·정밀 실태조사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재 무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공유재산 결산) •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 계약심사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계약심사 관련 법령·제도개선 관련 업무 • 원가분석 자문회의 관리 및 운영 업무 • 계약심사 통계 관련 업무 • 일반용역, 정보통신용역 계약심사 •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 • 민간위탁 심사기준 제정 및 변경, 원가산출 교육 등 • 물품제조 및 구매 계약심사 • 인쇄물 기획·편집 및 제작 계약심사 • 토목공사, 기술용역(토목분야) 계약심사 • 물품 제조·구매설치 계약심사(해당기관 토목분야) • 서울형 품셈 개발 및 개선 업무 총괄 •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총괄 • 공사 공통자재 단가조사 총괄 • 토목 분야 계약심사 전 사전검토제 • 토목공사, 기술용역(토목분야) 계약심사 • 건설폐기물 용역 자료조사 및 수집 (총괄) • 토목분야 계약심사 전 사전검토제 • 서울형 품셈 개발 및 개선 업무 • 건축공사 계약심사 • 조경공사 계약심사 • 계약심사 전 사전검토제 총괄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재 무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품셈 개발 및 개선 업무 • 3천만원 미만 일반물품구매 • 물품구매 계약심사 (수목 및 초화류) •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계약심사 • 기술용역, 물품 제조구매 계약심사(설비) • 종합공사 대상사업(5억원 이상) 내 포함된 설비공사 • 설비분야 계약심사 전 사전검토제 • 서울형품셈 개발 및 개선 업무 •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지방세제 개선 및 지방세 법령 개정 업무 • 지방세자치법규 운영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 자치구 재정보전금 및 부동산교부세 교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제증명 운영 • 마을세무사 운영 •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업무 • 부동산가격공시지원 및 시·도 검증센터 설치 추진 업무 • 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자치구 지원 • 건축물 시가표준액 고시 관련 업무 •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조사 산정 •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 • 조세심판원 대응 •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 감사원 심사청구 업무 • 조세심판원 대응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재 무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 소송 총괄 • 시세 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소송 공동수행 • 지방세 세입의 총괄·조정 •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 시 세입의 징수보고서 총괄표 작성 • 시 공금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 수립·조정 •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 법인 세무조사업무의 총괄계획 수립·조정 및 자치구 지도·감독 •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 지방세업무 전산화추진 총괄·조정 •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세외수입 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 세외수입 지도·감독 총괄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체납징수 총괄, 지침, 체납징수기법 공유·지원 • 자치구 고액시세 이관, 자치구 지도점검 • 체납차량 합동단속, 영치, 인도명령, 서울시설공단 관리 • 명단공개, 체납처분위탁, 공공기록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 고액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 법원공탁금 총괄, 납세의무확장 총괄, • 임대차보증금·분양권, 특별징수불이행범 고발 총괄 • 소관 체납자 추적, 징수, 정리보류, 재산 압류 및 추심 등 • (총괄)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가상자산, 체납차량 공매 • (총괄) 정리보류, 출국금지, 체납처분중지 • (총괄) 감치 고발(고발총괄), 급여압류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평생교육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조직, 시의회, 주요업무계획, 예산, 서무업무 등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에 관한 사항 • 교육경비 보조사업 총괄 및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운영 •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감독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리 및 교육분야 후원 업무 • 서울런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 서울런 사업진단 및 만족도 조사 • 온라인 콘텐츠 운영 용역 관련 관계기관 협의 등 • 서울런 기본계획, 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관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추진 등 • 서울형 교육플랫폼 브랜드 개발 • 서울런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총괄, 자치구 등 유관기관 소통 및 협업체계 마련 • 온라인 콘텐츠 신규 발굴 및 제공 관리 • 맞춤형 비교과 소양분야 콘텐츠 제작 • 맞춤형 자기계발, 학습법, 진학설명회 개최 •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기획 및 관리 • 직업문화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 교육플랫폼 대상별 서비스 전략 수립 • 서울런 회원 학습지도관리, 학습통계 분석 등 • 서울형 교육플랫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서울형 멘토링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 서울런 멘토단 선발·운영 관리 • 멘토링 홍보 및 각종 활성화사업 추진 • 멘토링 성과관리, 멘토단 인증서발급, 민원관리 등 • 학교보안관 운영·관리 및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 지원 •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등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리 • 입학준비금 및 무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평생교육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추진 및 학교체육관 건립지원 • 서울런 4050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 50플러스재단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추진,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 대학연계학습 및 학점 연계형 프로그램 관련 업무 •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 및 교류협력 추진 • 명예시민학위제 업무 총괄 • 비영리단체 등록 관련 업무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 문해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서울시 문해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 학력미인정 문해교육 및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디지털 평생교육 및 시민성 교육 확대 강화 • 민주시민교육, 독도 교육에 관한 사항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시스템 구축, 운영 및 관리 • 평생학습포털 콘텐츠 임차 및 운영 • 서울런 4050 직업전환 콘텐츠 확대 및 제공 • 서울리테크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노후장비 및 상용 SW 교체 • 정보화 사업 및 정보보호 관련 업무 • 평생학습도시 국비지원 및 대한민국 인재상 관련 업무 • 서울런 4050 실국별 세부사업 성과관리 • 서울런 4050 홍보에 관한 사항 • 중장년 직업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운영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평생교육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50플러스센터 확충 및 운영 지원 • 서울시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운영 • 서울시 50+재단 가치동행일자리사업단 관련 업무 •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 50+ 및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확충·관리 •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 및 관리 •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및 업무계획 수립 • 청소년시설 디지털 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 청소년 국내·국제교류 업무 • 서울시민상(어린이, 청소년부문) 운영 • 어린이날 및 성년의날 기념행사 • 청소년미디어센터, 활동진흥센터, 청소년음악센터, 문화교류센터 운영 관리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지원 • 청소년센터(21), 특화시설(2), 유스호스텔(2) 등 관리·운영 • 청소년센터 행사, 특성화사업 추진 • 청소년센터 안전점검 및 시설 유지관리 • 청소년시설 기능보강·건립·확충 • 국고보조사업(청소년지도사) 및 특화사업(유스데이, 찾아가는센터, 현장맞춤형 활동) • 청소년시설 할인 손실금 및 사용료 감면 •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 • 시립,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 인터넷중독 예방, 치료사업 등 인터넷중독예방센터 운영, 지원 •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청소년쉼터 설치·운영 지원) • 성문화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지원(청소년성문화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드림센터 운영지원 • 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추진 • 청소년시설 평가지표 개발 등 개선계획 수립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평생교육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 보고·청취 • 시책 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시설 지도·점검계획 수립·시행 • 청소년시설 회계감사 시행 • 청소년 의회,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업무 •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업무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 친환경학교급식(유치원 포함)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 친환경학교급식(유치원 포함) 지원 예산 교부 및 정산 • 친환경급식 지원예산 집행 합동점검 추진(학교 및 유치원) • ‘찾아가는 서울시 식생활교육’ 사업(유치원·어린이집) 운영 • 친환경 식생활교육 강사양성 과정·심화과정·평가회 운영 • 찾아가는 유치원급식 예산교육 운영 • 학교급식 관련 교육청 등 대외기관 협력 업무 • 친환경학교급식 조례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친환경학교급식 총괄, 인사, 조직, 예산, 일반 서무 업무 • 친환경유통센터 사무위탁 운영·예산 관리 • 학교급식 안전성 관련 계획 및 수립 및 운영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격심의·안전성 관리 등 업무협의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및 가격조사 • 학교급식 유관기관 산지체험 및 소통 업무 • 서울든든급식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서울든든급식 자치구(참여시설) 확대 추진 및 홍보 • 서울든든급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서울든든급식 조달체계 개편에 따른 전산시스템 기능개선 • 서울든든급식 개편에 따른 자치구 관련사항 처리 • 친환경유통센터 서울든든급식 식재료 관리 위수탁 업무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 만족도 조사 업무 • 공공급식센터 관련 사구 재산관리(동북4구, 강동, 중랑)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인재개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 e-러닝 콘텐츠 개발, 보수에 관한 사항 • e-러닝 교육과정 설계, 운영에 관한 사항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직장어린이집, 구내식당, 방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인재개발원 시설관리 및 녹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e-러닝 교육과정 운영 • 정보통신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교육통합시스템(LMS)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메트로폴리스 국제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 운영, 강사선정, 강사 Pool 관리에 관한 사항 •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7~9급 신입자 과정 계획 및 운영, 직무전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4·5급 창의리더십 과정 운영 • ‘창의행정 공감마당’ 과정 운영 • 직급직위별 리더십 교육에 관한 사항 • 행복한 정년퇴직준비 과정, 50대 인생디자인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신규 공무원(7~9급)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에 관한 사항 • 민간자격시험(간호조무사, 수렵면허 등) 시험관리 •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5~6급, 가~나급)에 관한 사항 • 전문경력관, 중증장애인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 4·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 역량개발 교육 과제개발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감사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공직기강 확립(계획·평가·점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재심통보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회 시정 현안사업 처리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회 법령·조례 등 총괄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 감사원 관련 업무(외부기관 감사, 이행실태 포함) • 권익위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 청백-e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 담당기관 관련 부패영향평가 처리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 감사업무 주관 • 담당 자치구 처분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면책 검토에 관한 사항 • 징계사전조정심의회 회의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면책 검토에 관한 사항 • 청렴 및 부패방지 업무 계획·전략 수립 총괄 •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 기관장 주관회의 운영 • 청렴정책 대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기관별 취약분야 분석·컨설팅 추진 • 청탁금지법 운영 총괄 • 공무원행동강령 제도 운영 총괄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총괄 • 공무원 외부강의 등 신고·점검에 관한 사항 • 기관별 청렴지수 성과평가(BSC) 총괄 • 청렴정책 홍보 총괄 • 반부패·청렴 교육 총괄 • 청렴해피콜 운영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제도개선 총괄 • 사전컨설팅 의견 제시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콘텐츠 제작·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감 사 위 원 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총괄 • 공직유관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 취업제한 퇴직자 취업심사에 관한 사항 • 공직윤리업무 전산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주식매각·백지신탁·가상자산 관리 • 투자출연기관 감사계획 수립 총괄·실지감사 실시 • 투자출연기관 내부통제 및 청렴도 강화 총괄 • 투자출연기관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 • 투자출연기관 인사검증(기관장, 상임감사, 이사) •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 채용분야 사전스크린 •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활동) 평가 • 투자출연기관 청렴도(부패방지 시책) 평가 • 투자출연기관 공직기강 점검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 주요사업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 감사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 일상감사 관련 제도개선·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일상감사 미의뢰 점검 총괄 •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총괄 • 안전감사 연간 종합계획 수립·조정 • 연간 안전감사(점검) 및 기동점검 실시 • 중대사고 및 특별시책 관련 감사(점검) 실시 총괄 • 찾아가는 청렴·안전감사 사례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감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안전감사 옴부즈만 관련 업무 • 하도급 감사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하도급 감사조사 및 개별 수명사항 처리 • 하도급 감사 감사결과 수범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감 사 위 원 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부조리 신고민원 접수 및 처리 총괄 • 하도급계약집행의 불공정방지 면담,지도,감시,직권조사 • 하도급 관련 교육 및 제도개선 관련 업무 • 하도급 부조리 해소를 위한 현장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항에 관한 사항 • 청렴도 및 부정비리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외부기관(검·경, 감사원 등) 통보사항 총괄 • 내부징계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권익위 이첩·송부사건(부패·행동강령) 관리에 관한 사항 • 청렴도 비위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 사전예방적 조사활동 추진 총괄 • 공익제보 보·포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익제보 활성화(홍보 및 교육 등) • 공무직·공공안전관 처분 등 총괄 •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 감찰업무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 감찰결과 적출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시 민 감 사 옴 부 즈 만 위 원 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 세계옴부즈만협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블록체인 기반 주민·시민감사 청구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사업 감시대상 선정시스템 및 양방향 소통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감사시스템 운영(DB관리 포함)에 관한 사항 • 민원처리 관련 응답소 시스템 개선 협의 사항 • 민원배심제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배심제 홍보에 관한 사항 • 시민·주민감사 재심의 관련 사항 • 위원회 민원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사항 • 위원회 연차보고서, 안내책자 제작·발간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청원시스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청원사항 접수, 조사,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조례 및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제도 발전방안 연구 및 토론회 관련 사항 • 감사·조사·감시 등 위원회 소관 법규집 관리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법령질의 회신, 법률자문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시 민 감 사 옴 부 즈 만 위 원 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주민·직권 등 감사 운영에 관한 사항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주만직권 등 감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주만직권 등 감사 심의(검토)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 시민주만직권 등 감사 감사결과 재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감사결과 공표 및 공공감사시스템 입력에 관한 사항 • 법률자문단 구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 접수 및 이송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 활동실적 보고(분기별)에 관한 사항 • 소극행정 보고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 조사에 관한 사항 • 자치구 민원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관한 사항 • 응답소 현장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 • 응답소 현장민원 내 지역 지킴이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수립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 공공사업 감시 업무 안내서, 사례집 작성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옴부즈만 관리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촉, 해촉, 연임에 관한 사항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시 민 감 사 옴 부 즈 만 위 원 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 공공사업에 대한 감사평가에 관한 사항 • 서울시의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사항 •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 사항 •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 및 지도점검 사항 •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항 •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사항 • 인권침해 조사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사항 • 시민권익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사항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보조금 지원) 사항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사항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사항 • 인권교육 운영 사항 •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지원) 사항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자 치 경 찰 위 원 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장비, 통신 등 정책 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경찰청장 임용 협의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수행관련 경찰청, 서울경찰청 협의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관련 서울시 관련부서 협력 총괄에 관한 사항 • 치안 협력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반려견 순찰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 러닝순찰대 및 대학생 순찰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경찰관서장 보임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표창 등 포상 업무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홍보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관련 민원·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경찰서장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 市행정-치안행정 업무협약·조정에 관한 사항 • 서울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부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치안상황 및 주요 사건사고 보고 총괄에 관한 사항 • 여성청소년 치안정책 조사·개발에 관한 사항 • 여성청소년 주요사업·사건사고 관리(시-경찰 협력)에 관한 사항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자 치 경 찰 위 원 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 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아동안전지킴이에 관한 사항 • 생활안전 치안정책 조사개발에 관한 사항 • 생활안전 사건·사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생활안전 분야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서울시-서울경찰청 생활안전 주요 협의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 감소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속도 5030 및 탄력 운영제에 관한 사항 • 보행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서울경찰청 교통 소관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서울경찰청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사무 부서평가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관 후생복지 제도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관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사업비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종합 감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감찰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인권침해 민원에 관한 사항 • 특수지역 경찰대(한강, 지하철)에 관한 사항 • 한강경찰대 연차별 시설개선, 순찰정 교체에 관한 사항 • 유실물 업무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서울특별시 자 원 봉 사 센 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센터 정·현원, 직제관리 등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 센터 인사, 급여, 보수체계,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 센터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센터 정보공개,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센터 회계, 세무,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 • 센터 복무 관리 및 직원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센터 채용, 직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법인 운영 및 정관 등 각종 규정, 내규에 관한 사항 • 위탁사무(공익센터)에 관한 사항 • 정책연구 조사, 자원봉사와 NPO 연계 방안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전략체계, 경영전략, 성과관리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약, 경영평가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 센터 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 브랜드 개발 및 매체 홍보·관리에 관한 사항 • 센터 발간물 및 자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웃화합 프로젝트 사업에 관한 사항 • 이웃화합 프로젝트 시범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웃화합 프로젝트 봉사단 교육에 관한 사항 • 이웃화합 프로젝트 대시민 캠페인, 홍보에 관한 사항 • 이웃화합 프로젝트 협력기업 발굴·연계에 관한 사항 • 서울동행 청년봉사 사업에 관한 사항 • ‘대학 연계 사회참여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 청년 기획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봉사학습(실천학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지역 돌봄 봉사 사업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민관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재난대응 바로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재난대응 바로봉사단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 기반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 자원봉사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서울특별시 자 원 봉 사 센 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 ‘모아’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 ‘모아’ 캠페인 운영에 관한 사항 • ‘내결에 자원봉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 캠프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캠프 활동가 역량강화(보수·심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관협력(기업·공공기관 등) 자원봉사 운영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 수요처 관리 및 담당자 교육에 관한 사항 • 자치구센터 협력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우수자원봉사자 인정·예우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및 시상식 운영에 관한 사항 • 1365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자 관리자 전문 교육에 관한 사항 • 시·구 정보화 관리에 관한 사항 • 시·구자원봉사센터간 지역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서울 장학 재 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 보고·청취 • 시책 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운영(장학생선정위원회, 자문위원회) •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24~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 성장지원사업 총괄 • 글로벌 장학사업 런칭(유학생 지원) • 장학사업 실적관리, 경영평가(사업 및 혁신지표) • 장학사업 제규정 관리, 고객만족도 • 서울희망대학진로 장학금 • 서울교환학생 장학금 •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 장학금 • 서울선순환 장학금 • 서울희망고교진로 장학금 •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 청춘스타트 장학금 • 성장지원사업(멘토링, 아카데미, 씬포터즈, 선순환 프로그램) • 서울희망공익인재 장학금 • 서울희망고교예체능 장학금 • AI서울테크대학원장학금 • 홍보(뉴미디어홍보, 보도자료) • 서울꿈길 장학금 • 서울희망하나고 장학금 • 이사회, 법인관련 업무(시교육청 등) • 감사, 안전·보건, 개인정보 보호, 규정 관리 • 장학생선발관리시스템(정보화전략, 홈페이지), 그룹웨어 운영 • ESG경영(인권경영 등), 성별영향평가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서울특별시 평 생 교 육 진 흥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기획 및 경영혁신 추진 • 기관 경영평가 및 성과관리, 기관장 경영계약 • 이사회 운영 및 시의회/국회/시 대응 대외업무 • 진흥원 원규 제·개정 관리 • ESG경영(인권/환경경영 및 사회공헌 등) • 창의경영 및 적극행정 추진 •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 • 경영공시 및 정보공개 • 진흥원 언론홍보, 홈페이지·SNS 채널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기관 홍보물 제작 및 연차보고서 발간 • 인사·노무제도 기획 및 운영 • 임직원 교육 기획 및 복리후생 관리 • 급여 및 총인건비 관리(퇴직연금 포함) • 회계, 세무 및 결산(4대 보험·원천세 신고 등) • 계약 총괄 및 공공구매 관리 • 전산 및 보안 업무(통합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등) • 시설안전보건 관련 업무(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기록물 관리 및 출판물 관리 • 총무(사무용품비 및 본원 계약 관리 외) 및 기관장 수행 업무 • <국가평생교육통계> 서울지역 현황조사 및 관리 • 서울시 평생교육정책 공급 및 수요 조사 • 서울시 평생학습 싱크탱크 위원회 운영 • 서울시 평생학습정책 이슈 분석보고서 <이슈포커스> 개발 및 발간 • 서울시 평생학습정책 공유 및 학습의 장 <작은 세미나> 개최 및 운영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중장기(2026~2030) 발전방안 연구 • 동(洞) 평생학습센터 운영모델 개발 및 체계화 연구 • 서울형 디지털배지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사업 성과관리 방안 연구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서울특별시 평 생 교 육 진 흥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개발 제안(Ⅰ·Ⅱ) • 진흥원 연구수행관리 및 지식공유 체계 구축 및 운영 기반 마련 • 자치구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자치구 평생교육 정책 현황 조사 및 찾아가는 컨설팅 운영 • 자치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 찾아가는 약자동행 심리건강 인문학 지원 사업 운영 • 디지털 문해학습장 운영 및 학습자 디지털 역량변화 조사 시행 • 문해교육 교원 양성 연수 및 보수교육 운영 • 서울형 성인문해교육 콘텐츠 개발배포 •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및 관계자 연수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전문 강사 지원 사업 운영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광역 단위, 프로그램 단위) 운영 •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글 햇살버스 운영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사업 운영 • 서울마이칼리지 운영(일반대, 전문대, 인증형) • 서울마이칼리지 대학 컨설팅 및 운영 모니터링 • 서울마이칼리지 사업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 학습결과 인증, 선수학점 등 대학연계 협력모델 추진 • 대학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 대학 평생교육 지원체계(플랫폼 등) 구축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대응 • 시민대학 종합기획 및 성과 관리 • 예산 및 운영체계 관리, 행정 대응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홍보 종합기획 및 성과 관리 • 유튜브·온라인 시민대학 운영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관리 및 대응 • 학습매니저 선발 및 역량 강화 • 신규강사 공개선발 및 역량 강화, 강사 관리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비 징수 및 정산 관리 • 정규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 캠퍼스 특화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 리테크 사업 종합기획 및 성과 관리 • 중부권 캠퍼스 시설 관리 및 대관 • 시민커뮤니티 기획 및 운영 • 동남권 캠퍼스 학습매니저 배치·관리 • 동남권 캠퍼스 홍보 • 동남권 캠퍼스 시설 관리 및 대관 • 시민대학 인생디자인학교 종합기획 및 성과 관리 • 시민대학 명예시민학위제 종합기획 및 성과 관리 • 명예시민학위제 통합 행사 운영 • 모두의책방 조성 및 운영 • 모두의학교 캠퍼스 학습매니저 배치·관리 • 모두의학교 캠퍼스 홍보 • 모두의학교 캠퍼스 시설 관리 및 대관 • 다시가는 캠퍼스 개관 행사 운영 • 다시가는 캠퍼스 학습매니저 배치·관리 • 다시가는 캠퍼스 홍보 • 공유오피스 운영 지원 • 다시가는 캠퍼스 시설 관리 및 대관 • 시민대학 7학년 교실 종합기획 및 성과관리 • 7학년 교실 통합 행사 및 홍보 • 청렴·감사 부패방지 시책업무 • 내·외부 감사 및 조사업무 • 공직기강 확립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관리 • 일상감사제도 관리 및 점검 • 부조리통합신고, 응답소 등 내·외부 제보 대응관리 •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및 관리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감사, 반부패·청렴 시책, 인권경영 • 신고센터 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대응 • 미래10년TF팀 운영 및 추진 사업 • 재단 경영전략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 •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 재단 제규정 및 내규 관리 •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 편성·추산 •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이행 및 활성화 • 민원 행정 서비스 대응 • 기관 업무협약 추진 • 중장기 인적자원 계획 수립 및 인사제도 • 직원 임용 및 인사관리, 각종 위원회 운영 • 직원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등 노사제도 운영 • 복무관리(근태, 초과근무 등) 및 직원 복리후생 • 직원 급여, 성과급, 부가급여 지급 및 인사시스템 운영 • 임직원 사회공헌활동 및 조직문화 활성화제도 운영 • 행정정보 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운영 • 재무 건전성 및 내부통제 전략 수립 • 회계결산 및 회계감사 • 지출·수입 관리, 회계처리 및 출납업무 • 계약 및 조달구매 등 • 재물관리 및 사무기기 조달 및 운영 • 구매실적 관리, 차량 관리 등 • 홍보 기획 및 관리 등 전사 홍보 및 관리 등 • 50+포털 운영, 보도자료 관리 및 주요언론 매체 광고 등 업무 • 뉴미디어 홍보전략 수립 운영 • CI·정책 브랜드 기획 및 관리 • 중장년 정책 연구 및 개발 • 중장년 통계 구축 및 조사 분석 연구 등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사 항 |
|----------------------|--|---|
|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 정책 이슈 발굴 • 중장년 정책 포럼 기획 및 운영 • 중장년 정책 및 성과 확산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정책 네트워크 구축 • 40대 직업 전환 지원 사업 기획 및 성과 관리 • 서울시 현장학습 대상 40대 특화사업 운영 • 40대 특화 이·전직 프로그램 운영 • 40대 특화 공간 운영 활성화 • 전사적 정보화 체계 기획 및 운영 • 고객 데이터 관리·기획·운영(분석) • 정보보안(사이버침해대응, 시스템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시니어 전용 일자리 플랫폼 운영 • 기업연계 서울형 일자리 기획 및 발굴 • 취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 서울시 시니어일자리박람회 개최 • 경력 전환, 취업 지원 사업 및 권역별 잡페어 기획·운영 •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운영 • 창업·창직 지원 및 공유사무실 운영 • 중장년 취업연계 등 상담센터 운영 • 경력설계프로그램 기획·운영 • 중장년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사업운영본부 전략 수립 및 운영 등 • 50+정책 전달체계 지원·관리 기반 조성 등 •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기획 및 운영 •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및 운영 • 재단 재난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 캠퍼스 등 시민이용시설 재물 및 자산 관리 |

7. 감사결과 의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현황표

(단위: 건)

| 기관명 | 계 | 시정·처리 요구사항 | 건의사항 | 기 타 (자료요구 등) |
|----------------------|-----|---------------|------|-----------------|
| 계 | 375 | 228 | 107 | 40 |
| 비 상 기 획 관 | 32 | 17 | 14 | 1 |
| 민생사법경찰국 | 26 | 17 | 7 | 2 |
| 행 정 국 | 39 | 21 | 12 | 6 |
| 재 무 국 | 37 | 22 | 11 | 4 |
| 평 생 교 육 국 | 35 | 23 | 9 | 3 |
| 인 재 개 발 원 | 34 | 24 | 8 | 2 |
| 감 사 위 원 회 | 28 | 18 | 7 | 3 |
| 시 민 감 사 옴부즈만위원회 | 25 | 17 | 8 | 0 |
| 자치경찰위원회 | 34 | 19 | 11 | 4 |
| 서 울 특 별 시 자원봉사센터 | 25 | 13 | 8 | 4 |
| 서울장학재단 | 22 | 13 | 7 | 2 |
| 서 울 특 별 시 평생교육진흥원 | 22 | 13 | 4 | 5 |
| 서 울 특 별 시 50플러스재단 | 16 | 11 | 1 | 4 |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228건

□ 비상기획관 17건

1. 서울안전통합센터 방호시설 점검·조치 미흡 시정 필요
 - 방폭문·가스차단문 등 핵심 방호시설에서 동일 항목 불량 반복, 조치 지연, 점검·조치 기록 불일치가 확인됨. 일부 시설은 9개월 이상 방치된 사례가 있음. 비상 대응시설의 기능 상실 위험이 커 시급한 조치 체계 정비가 요구됨. 즉시조치, 재시험, 기록 검증 등 전 과정을 재정비해 반복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함.
2. 예비비 사용·보고 절차 조례 위반 시정 필요
 -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이 다음 분기 보고 시한을 넘겨 의회에 지연 보고된 사실이 있음. 이는 예비비 보고 의무를 규정한 조례 위반에 해당함. 향후 모든 예비비 사용 건은 보고 기한을 준수하도록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 절차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
3. 송파 방공호 설치 관련, 당초 성동구치소 부지가 방공호 설치 장소로 선정된 사유와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하고, 방공호 설치 내용·규모·운영계획 등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아울러 정확한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하고 충분한 안내·소통을 실시할 것
4. 송파구청과 해당 지역 시·구의원 등에게 사전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상 잘못이므로 이를 즉시 바로잡고, 앞으로는 사업 추진 전 과정의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공유할 것
5.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지요원 괴롭힘 경험 조사결과 32.3%가 복무 기관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 지시 남용이 23.7%로 가장 많고 이어 부당 대우, 언어 폭력, 성폭력, 성희롱, 신체 폭력 순으로 나타났음. 예방교육과 인식교육 등 사회복지요원의 건강한 복무 환경 조성 및 책임자 관리 방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방안 강구
6. 핵 대피시설은 민방위 시설로 국방부 협의 대상이 아니고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핵이나 화생방 대응시설 등은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만큼 민간인들이 이러한 전문적인 영역을 모두 알기 어려우니 법적 기준이나 기술검증 등 충분한 설명과 검증 절차 마련
7. 강서구 마곡안전체험관은 서울시/교육부/강서구가 각각 사업비를 부담하였음.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한 안전체험관 운영비(강사료)에 대한 환수 등 조치 필요
8. 서울수복기념행사 사후평가 미실시
 - 제75주년 서울수복기념행사는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주요 공공 행사임에도 홍

보 효과·시민참여·만족도 등 공식 사후평가가 전혀 실시되지 않음. 이는 행사 성과 검증 부재로 이어짐. 향후 유사 행사는 종료 즉시 정량·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시민참여 확대·콘텐츠 보완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

9. 자치구 방독면 확보율의 구조적 격차

- 종로 116%, 광진·동작 등 55% 수준으로 자치구 간 방독면 확보율 격차가 심각함. 매칭비 부담과 보관공간 부족을 이유로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것은 비상대응 체계 취약성을 초래함. 시는 국비 의존적 관행을 탈피해 시비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하고, 확보 목표를 구체화해 자치구별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함.

10. 사회복지무요원 보상금 관리 체계 미흡

- 사회복지무요원 보상금 중 시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 제도개선 반영 여부 확인, 대응전략 마련 등 적극 행정이 미흡함. 국가사무임에도 지방 부담이 지속되며 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 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11. 송파구 아파트 단지 지하 핵병커 설치가 주민 홍보 없이 진행되어 지역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조치와 주민 소통을 신속히 추진할 것.

12. 안보정책자문단이 군 장성·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양성이 부족하므로 청년·여성 등 다양한 배경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 방식을 개선할 것.

13. 예비군 수송버스 만족도 조사가 전체 예비군 규모 대비 표본 수가 적어 대표성이 부족하므로, 향후 조사 방식과 표본 확보 방식을 개선할 것.

14. 자치구별 예비군 수송버스 예약 방식이 서로 달라 이용 혼선이 발생하므로, 예비군 모바일 앱을 통한 일원화와 체계적 홍보를 강화할 것.

15. 예비군 모바일 앱 구축이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축 즉시 예비군에게 적시에 안내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16. 사회복지무요원 징계·포상 통계에서 서울시의 징계율이 자치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해, 복무관리의 사전 지도·조직문화 및 제도적 허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할 것

17. 비상기획관 소관 16개 안보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중 서울시 재향군인회에만 보조금 지급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므로, 사업 성과와 적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재향군인회 편중 지원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마련할 것

□ 민생사법경찰국 17건

1. 바디캠·액션캠 운영기준 미이행에 대한 즉각 개선 필요
 - 의회가 요구한 바디캠·액션캠 운영규정 마련, 수사 장비 사용기준 보완은 1년간 아무 조치 없이 방치됨. 대검 협의·내부 예규 정비 등 추진 계획만 반복 보고하고 실제 성과는 전무함. 장비 사용 확대에 비해 기준 부재는 인권 침해 우려가 크므로 즉시 규정 제정, 관리체계 확립, 진행상황 보고 필요함.
2. 청소년 마약 수사권 행사 준비 미흡에 대한 조치 필요
 - 청소년 마약사범 대응을 위한 수사권 확대 필요성은 이미 작년 지적되었으나, 올해 추진실적은 단기 교육 3회에 그치고 실질 대응체계는 미비함. 10월 개설 예정이던 '청소년 마약 SNS 신고센터'는 기한을 넘겨도 미개설 상태였음. 역할 분담, 신고 처리 절차, 경찰·교육청 협력 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임시회(내년 2월)까지 개선 계획 및 실행 현황을 보고.
3. 불법 다단계 예방을 위해 노인회·경로당 등 유관 조직과의 협력망을 강화하여 어르신 맞춤형 홍보로 전환하고, 카드뉴스 홍보 중심에서 벗어나 어르신 밀집 지역을 겨냥한 현장 경고·안내물 설치를 대폭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홍보 체계로 개선할 것
4. 올해 범죄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전무.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신고 채널 접근성 개선,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시민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5. SNS를 통해 확산되는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시 모니터링·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반복 영업자에 대한 관리·대응을 강화할 것
6. 전단지 중심의 기존 홍보 방식을 탈피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학교·상담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보호 및 사후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7. 민생사법경찰국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장기 수사 경험 인력이 부족해 수사 품질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관 확충과 장기근속 가능한 인사체계 마련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
8. 현장 수사에 필요한 포렌식 장비가 2017년 도입 후 최신 기종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수사를 위해 장비 현대화와 신형 장비 도입을 신속히 추진할 것.
9. 수사정보포털 시스템의 개발·유지에 외부 업체가 일부 관여하고 있는 만큼,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할 것.

10. SNS·유튜브 기반으로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특성에 맞춘 모니터링 강화 및 AI 기반 자동 탐지 등 실효적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플랫폼과의 협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응전략 검토바람
11. 무신고 공유숙박이 주거지에서 소음·안전·미성년자 보호 문제를 지속적으로 초래하는 만큼, 자치구와의 공조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숙박 영업을 제도권 내로 유도할 수 있는 지속적 관리·개선 방안 마련
12. 청소년 유해물품 단속 체계의 기준 및 관리 부재
 - 학교 주변 단속 중 니코틴 함유 제품 여부조차 구분되지 않고, 행정처분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전자담배·니코틴 젤리·향료 젤리 등 신종 유해물품이 확산되고 있으나 별도 단속 항목 부재로 대응력이 떨어지는 상황임. 청소년 유해물품의 분류·단속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니코틴 제품을 포함한 세부 실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음.
13. 온라인·SNS 불법 판매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협력의 부재
 - SNS·온라인을 통한 불법 담배·니코틴 제품 유통 확산되고 있으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다”고 공식 답변함. 다른 기관과 협력 사례도 존재하지 않아 청소년 접근 차단 효과가 미미한 상태임. 온라인 불법 유통 감시체계 구축과 함께 타 기관과의 공동 단속 및 정보 공유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함.
14. SNS 기반으로 수사 단서가 다수 제기되고 있음에도 민사국이 자체적인 온라인 제보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 SNS 채널을 통한 제보 시스템을 구축할 것.
15. 단속·수사 건수 중심의 성과지표가 시민 체감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난이도·파급력·환수 실적을 포함한 실질적 성과지표로 전면 개편할 것.
16. 연도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을 그대로 복사해 설정되는 등 목표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되고 있으므로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것.
17. 수사 난이도, 기획수사 여부, 송치율 외에도 기소율·유죄 판결 비율 등 정성·정량 요소를 세분화해 성과지표에 반영할 것.

□ 행정국 21건

1. 최근 10년간 재임기간이 1년 이하인 서울시 실국장 및 본부장, 사업소장 현황에서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도 41%로, 실국장이 업무 파악만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음. 잦은 실국장 교체는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행정국은 단기적인 보상이나 순환 보직의 논리를 넘어, 해당 분야의 전문을 갖춘 인재가 충분한 기간 동안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북한 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의 중복수혜 검증체계 부재
 - 사회보장 협의 조건인 “통일부 취업장려금·새출발장려금과 중복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명단 요청을 시도했으나 제공받지 못해 사전 검증 체계를 갖추지 못함. 현재는 신청자 명단을 통일부에 보내 사후적으로 걸러내는 방식이어서 중복수혜 차단이 실효성이 낮고 정책 신뢰성이 저하됨. 정책 대상 총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구조적 보완이 필요함.
3. 공무원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 저조 및 관리체계 부재
 - 공무원의 성희롱·인권·폭력·성인지 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며, 부서별 관리가 미흡한 상태임. 현업 근무·PC 부재 등을 이유로 교육이 방치되고 있고 미이수 패널티도 없어 조례상 의무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법정 교육을 총괄 관리할 체계 구축과 전면 개선이 요구됨.
4. 공무원 근무특성 반영한 교육 방식 도입 필요
 - 현장·교대근무로 기존 PC 기반 이러닝 참여가 어려운 사례 다수 있음. 모바일 기반 교육, 사업소 순회교육, 단시간 집합교육 등 직무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함.
5. 북한인권포럼은 해외연사 항공료·연사비 등을 과도하게 편성해 놓고도 실제 집행을 못하게 되자, 애초 계획에도 없던 개회식 주제영상, 외국인 서포터즈 등의 항목을 뒤늦게 끼워 넣어 남은 예산 정산을 위해서 억지로 소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감지됨. 용역사의 불투명한 예산 운영에 대해 소관부서의 확실한 검수와 향후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함
6. 본관 서측 공사는 7차례 유찰 끝에 뒤늦게 공사비를 증액해 수의계약으로 밀어붙인 전형적 부실 추진 사례임. 게다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 증액이 불가피해 보임. 향후 공공건축물 조성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지보수 난이도나 예상 관리비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내부 사전절차를 마련하기 바람
7. 사업소·원거리 근무지에서 반복 제보되는 부정·편법 근태(우회 초과근무, 외 부활동 후 복귀 기록 등)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 사업소·자치구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우회 불가능한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8. 대정부 건의, 국회와의 협력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9. 최근 3년간 전자설문조사 및 퀴즈 운영 실적이 지속 감소하고, 참여 인원이 낮아 결과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또한 실적 저조에도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또는 대안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10.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시의원 위촉에 관련한 추진현황 등을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사전 보고·협의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음. 선거구 획정은 시민 대표성, 선거 공정성, 의회 구성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핵심 기능이므로 향후 소관 상임위와 보고·협의 절차를 명확하기 바람
11. 서울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령의 핵심 조항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규칙 또한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아 조례의 실행력과 행정 일관성이 저하되고 있음. 서울시는 조례 및 세부지침의 정비 없이 이를 추진 근거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제도 정비 필요
12. 용산구의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처럼 시민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내부 검증 등 서울시 포상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13. 조직문화 개선 성과평가 총괄부서의 성과 부진
 - 행정국은 조직문화 개선 평가를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하위권을 기록해 평가체계의 신뢰성이 저하된 상황임. 업무 특성상 유연근무 확대가 어렵다는 사유를 제시했으나 실질적 개선조치가 부족함. 항목별 부진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초과근로 관리, 유연근무 활성화, 업무 재조정 등 구체적 개선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14.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체계의 실효성 미흡
 - 공무출장으로 발생한 마일리지의 개인 업로드 방식으로 관리되어 등록 현황 파악이 불가하고 검증 절차도 없는 등 행정통제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항공사 시스템 차이로 전산 연계가 되지 않아 활용률 역시 매우 낮은 상태임. 업무관리시스템과 결재 연계, 자동 업로드 체계 구축, 점검 절차 마련 등 공적 자산에 걸맞은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함.
15. 장기국외연수 기회를 5·6급 등 젊은 연차 공무원에게 더욱 확대하고, 영미권 중심의 편중을 지양해 다양한 국가로 연수 기회를 넓힐 것.
16.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과 외국 도시 공무원 간 교류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피드백·동문 네트워크 등 지속 가능한 교류체계를 구축할 것.
17.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1인 가구 비율, 낮은 소득, 높은 만성질환률·자살 생각

비율 등을 고려해 기존 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

18. 주민자치 지역특화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지정 주제가 신설되며 탑다운 방식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19. 주민자치회 전환이 진행되는 시점에 서울시가 충분한 지원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20. 서울시청 공무원 연금매점이 시중가 대비 높은 가격과 상품권 사용 제한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 가격공시 및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
21. 육아시간 제도가 활용 여건이 부족하고 실질적 보상도 미흡하므로 대행수당·특별휴가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재무국 22건

1. 차기 금고 선정 절차가 곧 시작됨. 재무국은, 수십조원 규모의 서울시 자금을 관리하는 차기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관련 법정 절차와 관련 규정 준수를 통해 차기 시금고 선정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람.
2. 금고 사회공헌·기부사업 실적 관리 부실 시정 필요함
 - 사회공헌·기부사업 실적을 정리한 자료가 부실해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됨. 금고운영 평가자료 표준화, 제출 의무 강화, 사업별 실적 검증체계 구축이 필요함.
3. 정성평가 기준 및 배점 운영의 객관성 확보 필요함
 - 1·2금고 모두 동일 은행이 선정되었음에도 정성평가 점수 차이가 존재하고,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이 불명확해 평가자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음. 항목별 해석 기준 마련, 평가자 교육, 평가 기록지 보관 의무화 등 개선이 필요함. 동일 구성위원이 수행한 평가의 일관성을 검증할 체계도 마련해야 함.
4.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상정 및 절차 위반 재발 방지 필요함
 - 50플러스 동부캠퍼스 건립 과정에서 사업비 30% 이상 증액·부지 변경 등 사안 발생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무가 있음에도 의회 심의 없이 추진됨.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절차 누락이 확인됐으며 이는 조례 및 공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함. 전 부서 대상 공유재산 절차 이행 점검 및 전수조사, 사전통제 강화가 필요함.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의회 정례보고와 시의원 참여 등 앞으로도 후속조치들이 지속가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기 바라며, 특히 시의원 임기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회의의 연속성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재무국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추진하기 바람
6.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관련 분담금 및 이자 전액 연내에 조속히 환수 받을 것
7. 지방세 알림특에 자동납부 혜택은 안내되어 있으나 자동납부 방법이 없음. 자동납부 신청할 수 있는 어플 등에 연결이 필요함
8. 모범납세자 제도가 단순한 영예에 머물지 않고 세대 간 납세문화 확산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령 편중·이용률 저조 등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대별 수요에 맞춘 실질적 혜택과 맞춤형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9.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하여 업무에 관심을 갖고, 특히 과세기관 착오 환급금과 주소불명 등으로 환급이 안되는 부분 챙길 것

10.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금고 약정금리 공개가 의무화되는 만큼, 공개 기준을 체계화하고 금리·수익률 검증 절차를 확립하는 한편, 금리 경쟁 심화로 사회공헌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 체계 마련 필요
11. 정부의 차등지원제 및 지방세 개편으로 서울시의 불이익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영향 분석이 부족한 만큼, 실제 수혜·손실 규모를 신속히 산정하고 구조적 비용과 지역 격차를 반영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
12. 시금고 검사 실효성 부족 및 재검·제재 미비
 - 23~24년 금고검사에서 총 67건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조치 ‘종결’ 이후 재검·후속 확인 절차가 전혀 운영되지 않음. 2년 연속 제재 조치가 없는 것도 실효성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됨. 시금고 검사 결과를 자료를 구축하여 반복 패턴을 관리하고, 사후 점검과 제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함.
13.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의 절차적 하자
 - 공유재산심의위원 추천 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제외’라는 잘못된 해석을 적용하여 소관 상임위와의 협의 없이 타 상임위 의원을 추천함. 이는 조례·행동강령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절차적 하자로 판단됨. 향후 위원 추천 시 소관 상임위 협의 및 적절한 회피 규정 적용을 명확히 해야 함.
14. 위원 추천 관련 내부 의사결정 및 소통 절차 정비 필요
 - 위원 추천이 의회와의 사전 소통 없이 진행되어 오해와 절차 논란이 발생함. 향후 상임위와의 협의 - 의장 승인 - 추천 통보의 절차를 명확히 정립해 재발을 방지해야 함.
15.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과제 평가조작, 표절, 직장 내 괴롭힘, 극단적 선택 등 심각한 내부 부조리가 반복된 만큼, 서울시가 최대 출연기관으로서 선제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
16. 연구원 내 비정상적 조직문화와 인권 침해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외부 발표나 조치가 미흡했던 만큼, 서울시는 관련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17.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퇴직 공무원의 ‘경유지’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부적절한 인사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18.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진행 중인 만큼, 재무국은 파견 인력과 소통 채널을 통해 감독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받고 의회에 신속히 보고할 것.
19. 올해 3월 연구원이 발표한 조직혁신 비전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실행 현황을 종합감사 전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
20. 교육원 건립 명목으로 잉여금을 장기간 방치한 문제를 고려해, 사업 중단 이후 대안 활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것

21. 동일 업체와의 반복 수의계약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에도 전혀 차단되지 않은 채 편의·관행적 계약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즉시 중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강제적·전면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
22.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소관 상임위 의원 배제 방침에 대하여 ▲왜 상위법 위반·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외부 심의위원 풀 구성 과정의 폐쇄성 문제를 점검해 위원 추천 구조와 풀 구성 절차 전면 재정비 ▲타 시·도 및 다른 상임위의 심의 참여 관행을 체계적으로 비교·검토해 의원 참여 허용 범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법률 자문과 의회 의견 등을 종합해 상위법 위반 없이 소관 상임위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시금고 선정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평생교육국 23건

1.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상정 및 절차 위반에 대한 시정 필요함
 - 50플러스 동부캠퍼스 사업에서 2019년 목적변경, 2020년 사업비 30% 이상 증액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내부 방침만으로 추진함.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의회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임. 향후 유사 절차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 전수점검, 재산관리관 책임 명확화, 사전심의 통제 강화가 시급함.
2. 수유 영어마을(수유캠프) 조례 폐지 이후 재산관리 불일치 문제 시정 필요함
 - 조례 폐지로 법적 근거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유캠프 관련 예산을 지속 편성·집행한 것은 제도취지 및 재산관리 일관성과 충돌함. 조례 폐지 당시 의회에 보고한 '재산관리관 이관' 계획도 확보되지 않아 신뢰성이 저하됨. 향후 부지 활용계획 수립, 재산관리 명확화, 예산편성 정합성 확보가 필요함.
3. 서울런 성과를 서울대·의대 합격자 수로 홍보하는 것은 학벌주의·줄세우기식 성과 자랑에 불과함. 청년을 줄 세우는 왜곡된 성과 프레임을 중단하고 정책의 본래 취지와 교육지원 성과가 드러나는 책임 있는 홍보 체계로 전환할 것
4.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의 고용승계 기준 80%는 통폐합·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평생교육국이 민간위탁이 가장 많은 실국 중 하나인 만큼, 기획조정실과 적극 협의하여 정부 가이드라인 준용, 고용승계 기준 상향(사실상 100% 전제)을 통해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협약 해지와 같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
5. 향후 통폐합·위탁 전 과정에서 기존 인력과의 협의 및 고용안정 장치 의무화 필요
6. 청소년시설 49곳 중 절반이 넘는 26곳이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상 정원·직급 기준을 위반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시행규칙과 실제 인력 운영의 괴리를 즉시 바로잡아 정원 기준을 전면 재정비할 것
7.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청소년시설의 상시 업무를 비정규직·단기계약직으로 돌리는 편법 운영을 즉각 중단시키고,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8. 정원·직급 기준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우수시설'로 선정돼 인센티브까지 받는 잘못된 평가 관행을 바로잡고, 인력·정원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감독·제재의 핵심 기준으로 강력히 적용할 것
9. 소관 출연기관 지도감독에 대한 소극적인 방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여 기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 필요

10. 청소년 비영리법인 안내와 관련된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가 2017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모든 관련 정보를 최신 기준에 맞게 신속히 정비하고 주기적 점검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11.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간 미스매칭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고령층의 전문성·경험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고, 일자리 연계성이 강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12.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25.11.11.)으로 국가·지자체의 법적 책무가 규정되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체계, 전문인력·시설 접근성 등 기본 인프라 준비가 미흡함
1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반영, 센터 지정 등 법 시행 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필요
14. 출연금 편성의 적정성 검토·사전 협의 미이행
 - 최근 3년간 출연기관 출연금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출연 동의안 편성 과정에서 평생교육국 - 출연기관 - 예산과의 사전 협의가 미흡해 의회 제출 후 대규모 감액이 반복됨. 이는 의회 심의 기능을 형식화시키고 사업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출연금 규모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 검토·설명 절차를 의무화해야 함.
15. 손자녀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미이행
 - 국가보훈대상 손자녀까지 지원대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5년 1월 시행되었으나 사회보장협의 미완료로 실제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 대상자 검증·시스템 연계·예산 반영 일정도 불명확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보건복지부 협의의 속도와 예산 반영을 병행하여 2026년부터 실제 서비스가 시행되도록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함.
16. 학교보안관 직무교육·체력관리·위기대응 체계의 실효성 부족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은 화재·응급 안전 등 기본 교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침입 대응·대피 유도 등 실습형 위기 대응 훈련이 전무하여 현장 대응능력에 한계가 있음. 교육청·자치경찰과 협력하여 모의훈련 정례화, 체력 기준의 재계약 연동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17.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조례까지 제정하고 간담회·출범식·결과공유회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청소년 자율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즉시 예산반영 방안을 마련할 것
18. 서울런 논술 멘토링이 사교육 완화 목적과 달리 템플릿 기반·경험 공유 수준

에 머물러 실질적 학습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교육 효과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함

19. 인재개발원 외국 공무원 대상 강의자료에 한국 대학 서열 구조(SKY·서성한·중경외시 등)를 그대로 반영한 것은 정책 홍보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국제 연수 콘텐츠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
20. 인재개발원 외국 공무원 연수 강의자료강의용 영상이 불필요한 음성 덧입히기 등 낮은 품질로 제작된 점은 교육 신뢰성을 저해하므로, 콘텐츠 검수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할 것.
21. 현행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가 있을 경우 협약 해지가 가능함에도, 성희롱 사건 전력이 있는 법인이 청소년시설 위탁법인으로 다시 선정된 것은 매우 부적절함. 위탁 해지기준, 심사배점, 고용승계, 업무 인수인계 등 위탁관리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여 적격자심의 평가기준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22. 위탁법인 교체 과정에서 고용 미승계 시 상담 청소년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인수인계 철저
23. 의원 질의가 있는 뒤에야 뒤늦게 고용승계 여부를 확인하는 후처리식 행정은 시정되어야 하며,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부장·소장 전원이 공석인 상황에서 상담과 행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큰 만큼, 신뢰받던 부장 상담사 미승계로 인한 위기청소년 상담 공백과 심리적 불안을 즉시 해소할 것

□ 인재개발원 24건

1. 직장 어린이집 운영 부실 및 위탁 구조 개선 필요
 - 직장 어린이집이 저조한 이용률로 운영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 인근 기업 공동설치, 외부 어린이집 협약, 특화 프로그램 도입 등 단계별 대안 추진이 지지부진해 구조적 비효율만 심화되고 있음. 위탁기관 비용 과다 지출 또한 개선되지 않아 공공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 위탁 운영 구조와 운영 성과를 전면 재검토해 지속 불가 시 폐원까지 포함한 근본적 조치가 필요함.
2. 강의실 활용률 저하에 대한 실질적 개선 조치 필요
 - 강의실 중 상당수가 활용률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연간 유지관리비가 집행되는 상황에서 공간방치가 지속되고 있어 행정자산 낭비가 큼. 비대면 교육 증가와 채용 축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강의실 운영 전략이 부재함. 실사용률 분석, 공간 재배치, 외부 활용 허용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강의실 자원의 비효율을 시급히 해소해야 함.
3. 소속 직원 복무 기강 및 근태 관리 강화 필요. 예컨대 ▲상호 신고 제도 마련 ▲불시 근태 점검 강화 ▲원장의 적극적인 기강 관리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인재원이 근태 관리의 모범을 보일 것
4. 채용시험 관련 면접 인술·감독 업무가 고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과외 활동처럼 인식되고 있음. 특정 직원에게 몰리지 않도록 순번제 도입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5. 홈페이지 관련 반복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 필요. 예컨대 e-러닝 1.2배속~1.5배속 기능 도입은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규정만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6. 통근버스 운영의 법적 근거, 안전관리 기준, 교육생·직원 구분 등 필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방침)을 마련하고, 공용·임차 차량 혼용에 따른 책임소재와 사고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행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
7. 직원 의무교육 중 업무 병행으로 집중이 어려운 상황과 결석·지각 기준의 모호함으로 직원 불만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체근무 체계와 인정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것.
8. 직장어린이집 원아 수 감소가 지속됨에도 운영 방식·홍보·합병 검토 등 개선이 수년간 반복 논의만 되고 있어, 실질적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 결과를 명확히 제시할 것.
9. 직장어린이집이 법적 설치 기준(직장 50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적정 운영 인력 재조정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근 어린이

집과의 협력·합병 가능성을 검토할 것.

10. 서울시 인재 정책 방향성에 있어, 신규 공무원의 이탈 요인 및 정착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체 설문·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국과 협업으로 인재 순환·정착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11. 교육성과를 단순 만족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육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것
12. AI 교육의 양적 확대에 걸맞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시간·실습 부족 등 반복되는 불만을 개선하고 직무·직급별 실습형 교육과정을 확대할 것
13.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해 AI 윤리,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등 필수 교과목 신설할 것
14. 장기교육 출결·근태관리 미흡
 - 출결 체크가 수기·온라인 출석부 병행, 중간 이석·조퇴·불참 확인 체계가 부재함. 무단 결석·지각 사례가 다수 확인됨. 대리출석 가능성도 존재하여 교육 공정성과 안전관리 모두 취약함. 교육생 이석·조퇴 전용 기록체계 도입, 출결 기준 명확화, 수료·미수료 판정 기준 일원화가 필요함.
15. 교육생 위치 관리 및 안전관리 공백
 - 무단 이석·조퇴·외부 이동 시 즉각 대응 불가함. 현재 출석은 서명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어 실시간 확인이 사실상 어려움. 강의실 내 전자출결 시스템, 강의실 외 출결 불가 기능 등 기술 기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16. 임용시험 수동 타종 방식에 따른 반복 위험 요소
 - 조작 실수로 시험 타종 오류 발생했음. 수동 방식은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며 동일 사고 재발 우려가 큼. 매뉴얼은 개정했으나 자동 타이머·경보 연동 시스템 부재로 근본적 해결이 어려움. 시험관리 이중확인 체계 강화, 타종 자동화 전환 검토, 사고 대응 매뉴얼 고도화가 필요함.
17. 외국 공무원 연수 수료생의 이메일 기반 연락망 유지가 비효율적이므로, 사후 피드백과 동문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소통체계를 재정비할 것
18. 외국도시 공무원 연수 커리큘럼이 시장의 치적사업 중심의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균형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할 것
19. 외국 공무원 대상 교육콘텐츠가 사교육 업체 정보 제공, 대학 서열화 그래프 등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즉시 시정하고 기준을 마련할 것.
20. 외국 공무원 대상 교육강의 영상에서 한국어 음성 위에 영어 음성을 덧입히는 등 품질이 낮은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영상·교안 제작방식을 전면 개선할 것
21. 국제연수 사업이 서울의 글로벌 소프트파워 확장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의 전략적 기획과 품질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

22. 생성형 AI 교육이 기계적 이론 중심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과정은 계획, 수요 인원의 불균형이 발생함. 수요자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실습 중심 과정 확대할 것
23.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 사전절차 지연으로 일정이 수개월 밀리면서 10월 말에나 업체가 선정되어 올해 뒤늦게 편성한 추경 예산도 불용·이월 가능성이 높음. 이에 전체 사업 일정의 도미노 지연이 우려되는 바, 더 이상의 사업 차질과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 관리 철저
24. 인재원 도서실은 4만 권을 보유하고도 대여율 2.5%, AI 관련 도서 '0권' 구매라는 심각한 운영 부실을 보이고 있음. 자료 확보와 수요 반영, 도서·비도서(e북·디지털 자료 등) 구성 전반을 전면 재정비하여 운영 체계를 즉시 개선하고, 직원과 교육생에게 최대한의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

□ 감사위원회 18건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포상을 상·하반기 20건 내외로 포상하고 있으나,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된다면, 건수에 제한받지 않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경우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외부 전문가 참여 실적 저조 및 분야 간 편차 해소 필요
 - 공익감사단·안전감사오부즈만 등의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3회 미만 참여 전문가가 다수 존재하여 시정 요구에도 실질적 개선이 없었음. 사업별 참여 인원 편차도 심각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외부 1명, ‘도시철도9호선 위탁 점검’은 외부 4명 등 불균형 존재함. 전 분야 참여 기준 재정비·적정 인원 배치·연간 참여 목표 관리가 필요함.
3.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지연 및 연장통지 누락
 - 적극행정 국민신청 건 중 다수가 법정 처리기한(60일+연장 60일)을 넘기고도 ‘처리 중’ 상태로 남아 있으며, 연장 통지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됨. 이는 적극행정 지침 위반이며, 전담부서(감사위원회)의 관리 책임이 있음. 기한 준수, 연장통지 의무화, 처리현황 전산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함.
4. 최근 3년간 연간감사계획 변경이 과도하게 반복되고 계획 대비 진행 현황이 의회에 공유되지 않아 감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감사계획의 변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착수·진행·완료 현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공개하는 체계 구축
5. 감사 착수 지연과 연도 간 감사 이월로 인해 계획된 감사를 제때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연간감사계획을 연내에 완결할 수 있도록 인력·일정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부득이한 변경 시 사전 보고 및 통제장치를 마련
6. 공익감사단이 127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연간 참여 건수와 활동 인원이 매우 저조해 감사 대상의 다양성과 전문성 수요에 비해 활용률이 낮으므로, 공익감사단 운영의 효율성과 실질적 역할을 강화할 것.
7.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보호와 면책 범위가 확대된 만큼, 서울시는 관련 조례·규칙 개정과 함께 면책 기준·징계 면제 절차·재난 분야 특례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 보호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8. 자치구 감사가 10년 넘게 중단되고 감사 부서 간 교류·협력도 유명무실한 만큼, 자치구 감사 기능 재정비 및 교류 협력 체계를 강화
9. 감사위원회 업무 분장과 실제 수행업무 간 괴리
 -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상 규정된 감사위원회 업무와 제출된 업무분

장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직무 범위가 혼선되고 있음. 주요시책 점검, 투출 기관 범죄·비위 현황 등은 자료 부재로 감사 준비에 차질이 발생함. 법령·조례·업무분장 간 불일치를 즉시 정비하고, 감사대상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10.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실적 부재

- 최근 3년간 면책 신청·인정 사례가 거의 없고, 2024·2025년은 신청 자체가 전무함. 제도 인지도 부족, 기각 우려, 신청 회피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나 원인 분석과 개선조치가 부족함. 기관 안내·홍보·사례 발굴·절차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제도가 실질적 적극행정 촉진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11. 직장 내 괴롭힘 조사·후속관리의 실효성 미흡

- 괴롭힘 조사 건수가 증가했으나 조사·보호·재발방지 체계는 민원 중심 사후 처리에 머물러 있음. 가해자 분리, 보호조치, 조직개선 권고 등 제도화된 후속관리 기준이 부족함. 최근 서울시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반영해 기관책임 강화, 선제적 점검, 조사·사후관리 매뉴얼 보완이 필요함.

12. 반부패 청렴 분야 해외 교육·교류사업이 형식적 MOU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성과와 인력 TO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명확한 아웃풋을 제출할 것.

13. 안심변호사 법률 상담 건수가 2022·2023년 30건·25건에서 2024년 8건, 2025년 9월 기준 2건으로 급감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인지 부족·접근성 제약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할 것.

14. 안심변호사 상담이 시민이 직접 이메일로 문의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회신 여부가 전적으로 변호사에게 맡겨져 있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 전반을 재정비할 것.

15. 안심변호사 홍보 예산이 형식적 수준(포스터·영상 제작)에 머무르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적극적 홍보 전략을 마련해 시민 인지도를 높일 것

16. 내부청렴도가 외부청렴도 대비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문제를 단순한 만족도 차이가 아닌 조직문화·소통부족·내부 시스템 신뢰 문제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7.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실시한 민원인 대상 반복 문자 발송 등 단방향 캠페인이 내부 구성원의 청렴 체감도와 괴리를 만들고 있으므로,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함.

18. 내부 구성원의 공직환경에 대한 체감과 피드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직원의 의견을 반영한 청렴도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출할 것.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7건

1.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 실적 급감 및 공공사업 참관 편중 문제
 - '2024년 활동 실적이 2025년 75% 감소했으며, 이 중 290건이 공공사업 참관으로 집중되어 있음. 일반감시·법률자문 등 본래 기능은 사실상 부재함. 이는 활동범위 협소·운영방식 변경이 원인으로 추정됨. 시민 감시체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분야별 활동비중 재조정, 업무배분 원칙 마련, 연간 실행 계획 수립이 시급함.
2. 형식적으로 운영된 민원배심제 안전 발굴 TF를 전면 재정비하여, 연간 안전 발굴 목표와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계획 대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보고할 것
3. 민원배심제가 민원인 동의·피신청 기관 동의 등 과도한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상·요건 완화 등 문턱을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충분히 숙성·정교화한 뒤,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
4. 민원배심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방문 ▲통장회의·직능단체 등 대상 맞춤형 홍보 ▲고충·집단민원 상시 모니터링 ▲시민인권배심제 등 유사제도와 연계 방안을 통합적으로 구축해 민원배심제의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일 것
5. 시민인권배심회의가 사실상 7년간 방치되고 시행규칙도 제정하지 않는 등 직무태만과 관리 부실로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함. 이에 시민인권배심회의 운영 실태와 이관·관리 과정에서의 누락 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인권침해구제위원회와의 관계 및 역할을 포함한 기능·대상·임기·구성·심의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조례·시행규칙 개정 및 제도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보고해 주기 바람
6. 시민인권보고서 등 발간물의 미발간·미공개가 반복되고 형식 또한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발간·게시 의무를 준수하고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상시 공개·배포 체계 구축 필요
7. 온라인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분산되어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일 창구 안내·연계 시스템을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신고·청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8. 내 지역 지킴이 사업의 자치구별 실적 격차 및 미추진 문제
 - 2024년 일부 자치구에서 보조금 매칭 미편성으로 사업이 미추진되었으며, 자치구별 실적 편차도 크게 나타남. 현장 점검·불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미추진 자치구에 대한 원인 진단과 예산 편성 독려, 운영 실적 저조 자치구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개선 조치 체계

마련이 필요함.

9. 누리집·유튜브 등 홍보 콘텐츠 운영의 부실

- 누리집은 행감 대비 급하게 업데이트된 정황이 보이며, 유튜브 홍보 영상은 이전 제작본을 짜깁기해 사용하는 등 품질·성의 부족 문제가 반복됨. 홍보 실적이 상반기에 집중되고, 크리에이터 협업 예산과 실제 제작 실적 간 불일치도 드러나 개선이 시급함.

10.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이 매년 감소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청 절차·홍보·운영방식 전반을 개선하여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일 것.
11. 인권현장탐방 집행액이 공통자료와 의원 제출자료 간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것은 기본 행정 오류이므로, 자료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출자료 일관성을 확보할 것.
12.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에 헌법기행 및 민주화 테마 등 새롭게 부각되는 인권·헌법 이슈를 적극 반영해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학생 인권·교권 등 사회적 이슈도 다루도록 할 것
13. 온라인 인권탐방 영상이 오래되고 전달력이 낮아 교육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단순 영상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체감형·현장형 교육 방식으로 콘텐츠 전면 개편이 필요함.
14. 민주화 테마 ‘6월길’ 콘텐츠가 인재개발원 사이트에 게시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온라인·오프라인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교육 품질을 확보할 것.
15. 인권·청년 정책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업 시 단순 형식적 방문이 아니라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협업 구조를 더욱 강화하여 정책 연계성을 높일 것
16.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에서 프로그램 신청 TO가 남아 있음에도 ‘접수 종료’로 표시된 오류가 발생한 만큼, 시스템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7. 위원회 조사관들이 민원 대응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겪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제도적 허점 없이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반적 운영 체계를 면밀히 보완할 것.

□ 자치경찰위원회 19건

1. 오토바이 불법 난폭운전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업무보고 등 자료에는 없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분명한 노력이 필요함.
2. 학교폭력 예방교육 체계의 실효성 점검 필요함
 - 학교폭력 증가세가 두드러짐에도 예방교육 내용과 방식은 정체돼 있음. SPO 1인당 담당 학교 수 과중으로 교육 품질 저하 우려가 있음. 사이버 기반 학폭 증가에도 대응체계 미흡함. SPO 인력 운영의 적정성, 교육 내용 고도화, 예방 프로그램 실효성 점검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3. 용산2가동 셉티드 사업 설계 부적합 개선 필요함
 - 용산2가동 사업은 외국인 밀집지라는 잘못된 전제와 단편적 위험요인 분석으로 추진돼 실제 주민 두려움 지표가 상승함. 침입 우려 등 지역 특성 반영이 부족했고 보안등 설치도 지연됨. 현장 정밀 진단을 다시 시행하고, 시설 설치 전략·범위·우선순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4. 동국대 산학협력단의 경찰청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의회 의결·조례 근거 없이 시장 직인이 날인된 지원 협약서(의무부담)를 발급한 경위와 법적 타당성에 대해 업무상 배임·업무방해 소지 여부까지 포함한 정밀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공모 선정 및 예산 집행 적법성·유효성을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하자를 시정·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5. 한강경찰대 본대 실시설계 완료되면(2026.4) 곧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전액 확보할 것
6. 순찰정(중형선) 차질 없이 건조되는지 진행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것
7. 러닝 순찰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집주행, 소음, 상의 탈의 등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 순찰 코스·시간대·행동 기준을 명확히 하는 운영지침 정비 필요
8.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형 모델의 조직·인력·사무배분 등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정부·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서울형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시민 공감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설계 및 내부 대비 체계를 강화할 방안 모색 필요
9. 주민참여순찰대가 경찰 본연의 순찰 기능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범죄 상황에서의 표준 행동지침을 명확히 하고, 안전 중심의 운영 기준 재정비 필요
10. 주민참여 순찰대의 교육내용이 단편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통합교육 체계를 만들기 바람

11. 주민참여 순찰대의 운영이 실질적 범죄예방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평가지표를 만들기 바람
12. 대학생 순찰대 운영의 실효성·관리 부진
 - 대학생 순찰대는 활동 편차가 크고 전산화 부재로 수기 보고 중심 운영이 지속됨. 다수 대학의 활동 실적이 극히 낮음에도 동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시민 인식조사(52%) 역시 신뢰구간을 고려하면 과반 지지로 확정하기 어려워 정책 근거로 한계가 있음. 사업 유지·확대 결정 과정에서 내부 검토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 구조 전반의 재검증과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함.
13. 무인단속장비 노후화 대응 및 교체계획 미흡
 - 무인단속장비 내용연수 7년 경과 장비가 2028년 이후 대폭 증가할 전망임에도, 대규모 교체 물량 증가에 대한 재원 확보 전략이 미비함. 도로교통공단의 판단에 따라 연장 사용 가능하나 장비 폭증 시 예산 부담이 커질 우려가 존재함. 노후 장비 교체 규모·예산을 정밀 분석하고 경찰청과의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등 체계적 중장기 교체계획 마련이 필요함.
14.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의 회의록이 누락이나 지연 없이 적시에 게시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
15. 자치경찰 홍보 항목의 성과지표 단위가 매년 퍼센트→건수→퍼센트로 변경되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산정 방식과 단위의 체계를 명확히 할 것.
16. 성과지표 전반이 국가사무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 생활치안과 동떨어져 있으므로 1인가구·아동·생활밀착 치안 수요를 반영한 지표로 재편할 것.
17. 대학생순찰대 사업의 예산이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 제출 자료에서 서로 상이하게 기재된 만큼, 자료 작성 과정의 검증 절차를 강화해 기본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
18.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에서 성과지표의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 보이므로, 종합감사 전까지 지표 개편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
19.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와 경찰청의 논의·소통 내역을 종합감사 전에 상세히 제출하여, 지표 조율 및 제도 개선 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13건

1. 모아플랫폼 운영성과 저조에 대한 개선 필요
 - 가입자 6,132명 중 실제 활동자는 1,244명에 불과하고, 신규 가입 또한 전년도 대비 감소한 상태임. 플랫폼 활성화 전략이 부재한 만큼, 실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근거 기반의 개선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2. 자원봉사 활동이 고령층에 편중된 만큼, 30~40대가 참여할 수 있는 직장연계·가족봉사 등 청·장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개발하고, 젊은 층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인정체계를 강화할 것
3.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카드의 혜택이 현재 8개 시립 체육시설에 제한된 만큼, 공공시설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혜택 범위와 운영기준을 구체화한 확대계획을 마련해야 함. 또한 고령층 중심의 수혜 구조를 감안하여, 젊은 층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 제공 방안 역시 검토할 것
4.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카드가 과도한 발급 기준(10,000시간)과 제한된 혜택으로 인해 실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만큼, 발급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 바로봉사단 교육·훈련 인원 급감
 - 바로봉사단은 협약기관과 인원은 늘었으나, 교육·훈련 이수 인원은 급감함. 재난 대응을 위한 전문 역량 확보 없이 인원만 확대될 경우 현장 혼란과 봉사자 안전위험이 커질 수 있음. 서울 재난 특성에 맞는 정기·체계적 교육계획을 재수립하고 이수율을 관리·보고할 필요가 있음.
6. 만 시간 이상 봉사자 포상제도 실효성 부족
 - 만 시간 이상 봉사자 대부분이 60세 이상 여성임에도 혜택은 체육시설·경기장 티켓 할인 등으로 구성돼 실제 이용률이 매우 낮음. 이미 고령층 일반 할인과 중복되는 혜택이 많고, 실질적 지원 효과가 미미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음. 제도 목적(장기 봉사자의 예우)에 비취 포상 내용과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
7. 청소년 봉사학습 프로그램 참여학교·참여학생 감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8. 자치구별 참여신청 편차가 큰 만큼, 학교장 대상 설득과 홍보를 강화하여 참여 기회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것.
9. 구로의 경우 예산 전액 반납 사례가 발생했는데 향후 프로그램 운영 구조에 허점이 없도록 예산 집행 과정의 점검과 기준을 명확히 할 것.
10. 자치구에서 실시한 봉사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록 만족도 조사 의무화를 철저히 이행하고 결과 취합을 체계화할 것.

11. 양적 실적보다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의 의미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교육 콘텐츠 강화에 집중할 것
12. 최근 3년간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가 크게 감소한 만큼 교육지원청·자치구와의 협업을 강화해 참여 편차 완화 및 홍보방식을 개선할 것.
13. 자원봉사 유공 표창은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낼 게 아니라,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활동하고 애로사항을 공개적으로 청취해 자원봉사 참여를 실질적으로 독려할 것

□ 서울장학재단 13건

1. 예체능 장학금 지원 분야 확대 검토 미이행 문제 시정 필요함
 - 작년 행감에서 예체능 장학금 분야 확대에 'e-스포츠·연기·영화·모델' 검토가 요구되었으나 올해 추진 실적이 없음. 건의 수용 이후에도 검토자료·현황분석 없이 동일 예산만 반복 집행하는 등 후속 조치가 부재함. 장학금 목적(저소득 예체능 학생 지원)에 부합하는 학교 기반·수요 기반 분석 후 확장 가능 분야 재검토가 필요함.
2. 직원 내부만족도 저하 원인 분석 및 개선 필요함
 - 2023~2024년 점수가 50점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단순 인원 증원(2명) 외 구조적 개선 조치가 없었음. 업무 과중·경력 관리·이직 요인 등 내부 조직 진단 및 중장기 조직문화 개선계획 마련이 필요함.
3. 교육봉사단이 단기·소규모 운영에 머물러 참여 지속성과 교육효과가 낮게 나타난 만큼, 복지관 중심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혜자 특성과 장학생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지속가능한 사업 구조로 개선 바람
4. 참여 인원 중심의 현행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역량 변화·만족도·지속 참여율 등을 포함한 정량·정성 기반의 성과지표를 구축하고 장학정책 전반에 환류되는 평가체계 마련
5. AI 서울테크 장학금 운영의 구조적 한계
 - AI 서울테크 장학금은 학기 개시 이후 선발로 인해 인재 유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음. 수혜자의 주소지 조건이 없어 정착형 인재 양성이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일부 장학생은 기업 취업 연계 계약학과로 전입해 지급 정지가 발생했으나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함. 선발 시기 조정·주소지 기준 강화·환수 절차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6. 장학금 사후관리 및 이탈 원인 분석 체계 부족
 - 장학금 지급 정지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탈 사유·유형을 체계적으로 추적하는 데이터가 부재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되지 못함. 장학생의 학적 변경, 취업 연계 이탈 등 유형별 사유를 체계화해 관리하고 지급 정지 및 환수 조항을 명확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장학사업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단의 관리 지표 정비가 요구됨.
7. 서울 선순환 인재 장학금 평가체계의 한계
 - 현행 평가는 활동 회기수·참여 횟수 등 정량항목 중심으로 구성돼 멘토링의 질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함. 장학금 지급 직후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 결과가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함. 질적 평가 도입, 조사 시

기 분리, 멘티 성장효과 반영 등 체계 보완이 필요함.

8. 서울런 멘토단 중 일부에게만 선순환 인재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필요성과 목적이 불명확하므로, 선발 이유·평가 기준·TO 산정근거 등을 명확히 정비할 것.
9. 최근 3년간 장학 심사위원 명단이 반복적으로 동일 인물로 구성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심사위원 풀을 확대하고 분야·배경 다양성을 확보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
10. 장학사업 심사에서 학계 위주의 단일한 인력 구성은 평가 편향과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료·시민사회·실무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을 포함한 심사 체계를 구축할 것
11. 장학생 졸업생의 취업·창업 현황 파악 및 네트워크 유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장기적 관계 형성이 미흡하므로, 연락 체계 구축과 정기적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것.
12. 중앙정부의 글로벌 스칼라십 사례처럼 장기적 연락 두절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장학생 선정 때부터 졸업 후 보고·참여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효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3. 서울테크스칼라십(외국인 이공계 석사 장학사업)이 2년 연속 목표 대비 실적 크게 미달하고 있음. 사업 구조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13건

1.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편차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함
 - 이용자 중 약 59%가 사용액 0원, 전액 사용 약 29%, 중간 구간은 12% 미만으로 극단적 양극화가 발생함. 특히 자치구별로도 지역 편차가 큼. 접근성 문제, 기관 프로그램 난이도 부적합 등 구조적 원인 파악 후, 사용률 제고 및 기관별 편중 완화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보험 가입의 법적 근거 미비 및 절차 검증 필요함
 - 평생교육진흥원은 2025년 1월 1일~5월 18일 조례 제정 이전 기간에 영조물배상보험·시설물 재해보험을 이미 체결한 상태임. 해당 기간은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집행이 이루어졌고, 내부 검토·결재 과정의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음.
3. 최근 3년간 저연차 직원의 의원면직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임금·업무 과부하 등 내부 요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조직문화와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 보완이 필요
4. 리테크 사업의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최근 영테크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
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시민 수요 조사 방식이 연도별로 불균형하고 참여 인원이 급감한 만큼, 온라인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오프라인 병행 등 수요조사 체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시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전조사 기반 마련 필요
6. 프로그램 성과평가에서 정성·정량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체계를 재정비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 필요
7.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25.11.11.)으로 지자체의 법적 책무가 규정된 만큼, 조례 개정·예산 확보 등 법 시행 전에 필요한 준비체계를 신속히 정비할 것
8. 시민대학 박사과정이 단일 전공으로 운영되며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가 있었으므로, 다양한 전공을 개설해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
9. 평생교육진흥원 프로그램 이용률이 10대·20대·30대 등 청년층에서 지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세대별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것.
10. 10대·20대 청소년·청년층이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학교 밖 청소년·대안학교 학생 등 잠재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참여 확대 전략을 마련할 것.

11. 5060 넥스트 아카데미와 청소년 연계 프로그램은 긍정적 사례이나, 단일 사례로 그치지 않도록 전 세대를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할 것.
12. 2030세대 프로그램 예산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 대상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13.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의 부정 사용 가능성을 전면 점검하고, 이용권 모니터링 강화, 부정 사용에 대한 주의 및 조치에 대한 안내·홍보, 이용기관 관리 철저 등의 평생교육이용권 부정 사용 방지 대책 마련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11건

1. 운영 규정 위반 대관 반복 및 관리 부실
 - 캠퍼스에서 표영호TV·디플로코리아·폴무원 녹즙 등 상업·종교성·홍보성 목적의 대관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 운영규정(정치·종교·상업 목적 제한)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들이 다수 누적되고 있음. 특히 특정 유튜버 대관의 반복 승인, 후원사 홍보 포함, 목적 미검증 등 전체적으로 관리 체계가 미흡함. 대관 승인 기준 재정비·사전 검토 강화·승인 책임체계 확립·반복대관 차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내부 모니터링 및 운영 기록의 부정확성
 - 여러 건에서 대관 목적·참여 대상·사후 점검 결과가 실제 운영 내용과 불일치함. “시민 대상” 표기에도 참여자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일부 자료는 표기 오류·조치 누락 등 행정기록 신뢰성에 문제 있음. 사전 심사 - 현장 확인 - 사후 검증의 3단계 기록 체계 구축과 자료 제출 시 정확성 검증 절차 마련이 요구됨.
3. 최근 3년간 평균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의원면직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조직 안정성·승진 적체·근무환경 등 구조적 요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인사·복지·조직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개선이 필요
4. 최근 3년간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취업률이 5% 이하에 머물고 있어 예산 대비 고용성과가 매우 낮은 만큼, 행사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구직자 경력·직종 수요 분석에 기반한 실질적 일자리 연계 체계로 전환 필요
5.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참여기업 품질 편차와 구인·구직 미스매칭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기업 참여 요건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등 성과 중심의 구조 개편을 추진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효율적 지원 모델 마련 필요
6. 재단의 고유 사업(40~64세 중장년 지원)과 시니어 민간일자리 대행 업무간의 역할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재단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 필요
7. 세대(신노년층)의 특성(높은 교육수준, 전문직 등)을 반영 전문화·고도화 및 미스매칭 해소 필요
8. 중장년 일자리 지원 참여자는 대폭 증가했으나 취·창업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므로,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향을 마련할 것.
9.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가 일부 사업에서 미시행되고 있어 참여자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모든 주요 프로그램에서 정기적이고 신뢰도 있는 만족도 조사 체계를 구축할 것.

10. 외부 만족도 하락 원인이 증가한 탈락자·불만족자 비율과 관련된 만큼, 프로그램 품질·연계성과를 강화해 체감 성과를 개선할 것.
11.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신고 조사 절차 적절성 여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체 점검 결과 개선 포함 조직문화 개선과 조직 기강을 바로잡는 데에 적극적 노력 필요

나. 건의사항 107건

□ 비상기획관 14건

1. 방호시설 유지관리 체계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필요
 - 재난·테러 대응의 핵심 시설 특성상 점검 지연과 기록 오류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됨. 예산 부족·부품 조달 지연을 이유로 조치가 늦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산 확보 및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함. 점검 항목, 조치 결과, 검증 내역을 표준화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예비비 의존 감소를 위한 정식 예산 편성 검토 필요
 - 북한 풍선살포 피해는 반복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매년 예비비 사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국가·지자체 매칭 제도 도입에 따라 정식 예산 편성 또는 추경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반복 예비비 사용을 줄이고 안정적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디펜스서울 정책 추진 시 정치적·사회적 논쟁 가능성을 유념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것
4. 송파 핵 대피시설 설치 관련 송파지역 주민들에게 위험한 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시설의 목적과 운영방식 등 충분히 홍보하고, 평시 핵 비상상황 대비 체험관으로 활용 건의
5. 송파 핵 대피시설 평시 체육시설 전환이 즉시 작동 가능한지 궁금하며, 체육 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비상사태 발생 대비 전환 모의 훈련이 필요
6. 송파 핵 대피시설 설치 관련 행안부 민방위 대피소 설치기준과 국방부 방호 시설 기준이 서로 다른데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토의와 협의 필요
7. 송파 핵 대피시설 설치 관련 시설 완공후 관리주체에 있어서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토의와 검토 필요
8. 디펜스2030 추가질의 임. 송파지역 핵 대피시설 관련, 향후 확대 추진하게 될 경우 타 지역 확산 및 안테나 숨 모범사례를 반영한 시행착오 최소화, 예산 등 계획을 잘 추진하기 바람
9. 핵방공호 및 대피 인프라 확충 전략 필요
 -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의 핵방공호 사례처럼, 서울 전역의 대피시설 확충 전략이 필요함. 현재 대피소 비상물품 보급률은 매우 낮고, 지역별 편차로 인해 위기 시 시민 안전 보장이 어려움. 대피소 현대화, 노후 지하공간 활용, 구별 대피수요 분석 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 있음.

10. 안보정책자문단 회의가 국가안보 이슈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의 직접적 연계성이 있는 현안을 중심으로 실효적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운영 방향을 조정할 것.
11. 사회복지요원 실태조사가 모 연예인 논란 이후 시장 지시에 따라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된 점을 고려해, 기존 상임위 권고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개선 방향을 마련할 것.
12. 사회복지요원 복무 점검 횟수는 유사함에도 징계율이 서울시에만 높게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해 조직문화·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
13. 비상기획관 소관 온라인 플랫폼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2026년부터 실효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14. 민방위 관련 용역에서 동일 업체의 반복 수의계약·단독응찰 구조가 고착화된 경위와 제도적 원인을 전면 점검하고, 수의계약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등 신규업체 경쟁 촉진 및 동일업체 3년 연속 수의계약 시 재검토 의무화 등 제도 개선방안 필요

□ 민생사법경찰국 7건

1. 마약·불법시술(투스잼) 등 신종 위해행위 상시 모니터링 필요
 - 투스잼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성이 있으나 서울시 내 단속·신고·수사의뢰가 전무함. SNS·1인 뷰티샵 중심으로 확산되는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모니터링, 탐지체계 구축, 전문기관 협업 등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함. 시민 건강 피해 발생 전 대응 기반을 갖추는 것을 권고함.
2. 민생 침해범죄 신고센터·응답소 통합 운영의 실효성 점검 필요
 - 응답소 통합 이후 관련 민원 0건은 실적이 아닌 모니터링 실패 가능성이 높음. 통합 효과·불편 사례 조사, 신고 처리 흐름 점검, 모니터링 결과의 주기적 공개 등 운영 실효성 강화가 필요함. 형식적 운영 방지를 위해 연중점검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3. 서울시는 최근 3년간 불법전단 기획 단속을 사실상 중단하고 시민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음. 대포킬러 중심의 전화번호 차단 대책뿐 아니라 QR코드·VOIP 등 신종 수법까지 포괄하는 선제적 기획 단속과 실효성 있는 수사·차단 체계를 마련할 필요
4. 예방 중심의 청소년 흡연·유해물품 대응체계 강화
 - 단속만으로는 청소년 흡연과 신종 니코틴 제품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청·보건소·경찰과의 예방 교육 및 정보 연계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학교 중심의 예방 프로그램 확대, 무인 전자담배기의 성인 인증 사각지대 점검, 온라인 유통 위험 정보 공유 등 다기관 협력 기반의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5. 범죄심리·과학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 등 유관기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수사 역량 제고할 것
6. 국내 훈련·국외 훈련 등 직원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저조한 수준이므로 중장기적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연수 기회를 확대할 것.
7.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교체하고도 분석 실적은 줄고, 최신 스마트폰은 분석을 못 하며, 7~8년째 방치된 구형 분석 S/W와 구시대적 수사방식으로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고가 장비 도입뿐만 아니라, 최신 기종을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수사기법·전문인력 등 전반을 혁신해야 함

□ 행정국 12건

1. 근속장려금의 사전 검증체계 구축 필요
 - 통일부 지급 이력과 연동되지 않아 서울시 자체적으로 중복수혜 가능 인원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구조임. 사전 조회가 가능하도록 통일부와 정례 협의, 데이터 연동 방식 개선, 신청단계 확인 절차 신설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함.
2. 공무직 교육의 의무화·평가체계 강화
 - 법정 의무교육을 온라인·집합 혼합 방식으로 재설계하고, 현업 직종에 맞춘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함. 미이수 패널티와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직장 내 괴롭힘·인권 침해 예방 중심의 역량 강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공무직 교육·근태 관리 총괄체계 강화 필요
 - 현재 공무직 교육은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어 전체 실태 파악이 어렵고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함. 행정국이 총괄부서로서 교육계획 수립, 실적 취합, 미이수 확인 및 관리기준 마련 등 중앙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 있음.
4.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서 신생단체 중심으로 반복되는 보조금 부정 집행(3년간 83건, 약 1억 환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교육·컨설팅 강화 ▲회계 능력 부족 단체를 위한 인큐베이팅 체계 구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을 지속·발전시킬 것
5. 서울시 - 의회 간 상호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5급 이하 중심) 대상 의회 역할·업무 방식 교육을 정례화하거나 실질적 소통체계 구축, 대의회 업무 인력 확충 등 구조적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
6. 광역이 다른 지자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 관심과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 바람
7. 자치구별로 상이한 어르신 버스비 환급제도로 주민 간 형평성 문제와 민원이 반복되는 만큼, 광역 차원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
8. 항공사 협약 확대를 통한 공적 마일리지 활용성 제고
 - 공용계정 도입, 제약 완화 협의, 기부 프로그램 확대, 항공사 간 제도 편차 해소 등 실질적 공공환원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공적 마일리지의 사회공헌 전환체계 보완
 - 현행 기부는 개인 자발성에 의존하고 구매 방식은 금전적 환원 흐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공공성이 취약함. 복지·자원봉사 연계 기금화, 사회공

헌 프로그램 개발, 기부 인센티브 부여 등 공적 마일리지의 사회 환원 효과를 높이는 제도 보완이 필요함.

10. 청년·외국인·장애인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관련 사업과 연계해 서울시 주민자치 참여모델을 강화할 것.
11. 저연차 공무원들의 높은 퇴직률과 생활여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 자금 지원·복지포인트 등 형식적 처우 개선을 넘어서 ‘대도시 수당 신설’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협상할 것
12. 질병휴직의 근본 원인인 과중한 업무와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정신건강 상담 전문성 강화 ▲ 복귀 직원 대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우수 한시임기제의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 ▲ 업무 조정 등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재무국 11건

1. 복수금고제 취지에 맞는 운영기준 정비 필요함
 - 현행 체계에서는 1·2금고 모두 동일 은행이 지정돼 복수금고제의 경쟁·전제 기능이 사실상 상실됨. 금리·서비스 비교기능 강화를 위해 동일은행의 중복 수임을 제한하는 기준 마련, 회계 특성별 차등평가 방식 검토 등이 필요함. 제도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례 또는 심사기준 개편이 요구됨.
2. 금고 지정 축소에 따른 시민편의 영향 분석 필요함
 - 신한은행 영업점 축소가 확인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방문 불편, 세입·세출 업무 처리 부담 증가가 우려됨. 금고 지정 시 지점수·ATM 접근성 등을 정성평가 요소로 강화하고, 향후 금고 운영점포 변동을 모니터링해 개선방안을 포함할 필요 있음.
3. 차기 시금고 선정 관련하여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없이 공정한 진행이 필요
4.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간의 정합성을 재점검하고 기준·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
5.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위원의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방안 모색이 필요
6. 시금고 검사결과와 평가 연계 필요
 - 지적사항이 반복되며 검사·개선 구조가 형식화되고 있어 금고 재지정 평가와 연동하는 체계가 필요함. 지적유형·빈도·조치이행 등을 정량화하여 금고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반복 지적 시 감점·조건 조정 등 실질적 조치를 검토해야 함.
7. 과세전 적부심 급증 사안에 대한 사전 컨설팅 체계 구축
 - 재개발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과세 기준 불명확으로 24년에 적부심이 폭증함. 표준안 이전 단계에서 지침 부재로 주민 불편과 행정 낭비가 발생함. 향후 유사 쟁점 발생 시 사전 안내·컨설팅·지침 조기 마련을 통해 불복 누적을 방지해야 함.
8. 연구원이 기부금·출연금 구조 속에서 사실상 행안부가 관리하는 이종 구조가 조직 관리 부실을 초래한 만큼, 서울시가 정책 건의 등 적극적 개선 역할을 수행할 것
9. 연구원의 누적 잉여금이 100억 원 이상 쌓여 있음에도 활용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잉여금 사용 계획을 구체화해 의회에 제출하고 필요 시 회수 방안을 검토할 것

10. 지방세연구원 문제를 국무회의·중앙지방협력회의 등 국가적 의제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서울시는 현안의 심각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
1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과 관련하여 재산별 주관부서가 각각 달라 안내 내용이 제각각일 우려가 있으므로, 재무국이 이미 납부한 임대료 환급(상계) 방식 등 감면 처리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전 부서에 통일된 내용으로 안내·관리할 것. 아울러 임대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약 203억 원 규모의 세입 감소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정 보전방안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

□ 평생교육국 9건

1. 수유캠프 부지 활용방안 조속 마련 필요함
 - 위탁 종료 후 3년 이상 방치되어 기본 유지·관리비만 소요되고 있음. 조례도 폐지되어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공공·교육·청소년 프로그램 등 대체 활용모델 설계, 관련 부처 협의, 부지 재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필요 있음.
2. 친환경 급식 공급체계 중 유치원 공급망 개선 필요함
 - 유치원의 만족도가 학교 대비 현저히 낮고, 공급망·대면수령·물류 제약 등 구조적 한계가 있음. 유치원 전용 소단량 배송체계 구축, 교육청과의 지침 협업, 분기별 만족도 조사 확대 등을 통해 유치원 급식 공급 접근성 개선이 요구됨.
3.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가입 실효성 제고
 - 500만원 회비를 납부하며 가입했으나, 가입 이후 활동은 직원 1명 행사 참석에 그치고 교류·우수사례 확산 실적이 미미함.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교류 계획 수립, 우수사례 발표 준비, 벤치마킹 체계 마련, 위원회 공유 등을 통해 실질적 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4. 든든급식 자치구별 이용 격차 해소
 - 자치구별 편차가 큰 상황을 고려하여 비참여 기관 의견수렴, 집중 홍보, 원장 설명회 확대, 품질관리 보완을 통해 참여 격차를 완화해야 함.
5.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면서도 청소년·대안교육 관련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은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
6. 서울런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교육 연계성, 사교육 종속성 완화 여부, 다양한 교육 콘텐츠 확충 등 전면적 개편 방향을 마련할 것.
7. 서울런이 민선8기 이후에도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 대상의 공공교육 기능 강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할 것
8. 평생교육국 보도자료는 서울런 사업 홍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친환경 급식과 사업 홍보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평생교육, 청소년정책, 친환경급식 등 전체 소관 업무가 고르게 드러나도록 균형 있게 작성·배포할 것
9. 친환경급식과의 역할과 기능 개편 검토 필요. 조직과 인력 개편까지도 함께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인재개발원 8건

1. 직장 어린이집 기능 강화 위한 대체·특화 프로그램 도입 검토 바람
 - 운영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 보육 기능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짐. 영어·예체능 등 특화 프로그램을 시간제 대체교사 활용 방식으로 운영하고 인근 어린이집과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이용률 제고가 가능함.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사례도 참고하여 대체적 운영모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강의실 활용도 제고 위한 대규모·실무 중심 과정 재편 필요
 - 하반기 대규모 집합 교육이 종료되면 일일 교육생 수가 급감하고 있음. 승진·정년과정 등 대규모 교육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중 분산 운영하고, 실무·현장 적용형 장기교육 확대를 통해 공간 활용을 높일 수 있음. 교육생 동아리·모임을 내부공간에 수용하는 것도 활용률 개선에 실익이 있음.
3.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LMS) 구축 시,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요구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용 편의성과 실용성을 높이기 바람
4. 신규 공무원의 채용·교육·정착 등 서울시 공직사회의 인재 순환 구조를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청년층의 공직 기피 현상을 단순한 외부 요인으로 보지 말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할 것
5. 정책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의 개념·범위·추진전략을 명확히 재정립할 것
6. 전자출결·자동화 기반 관리체계 도입 필요
 - 현 출결관리 방식은 대리출석, 무단 이석, 재실 확인 누락 등 허점이 많음. 대학 등에서 도입한 강의실 내 전자출결, 위치 기반 자동 체크, 이탈 시 자동 기록 시스템 등을 참고해 단계적으로 도입 필요함. 비용 추계와 시범 적용 후 확대 시행 검토가 요구됨.
7. 신규 공무원 조기퇴직 대응을 위한 조직적 관리체계 구축
 - 신규 임용자의 1년 내 퇴직률이 상승해 조직 적응 실패가 반복되고 있음. 신임교육 종료 후 현업 배치 모니터링, 적응도 조사, 부서 근무 강도 분석, 보호배치 기준 마련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퇴직 사유 정기 분석 및 교육 피드백 반영도 병행해야 함.
8.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LMS)의 ‘AI기반 지능형 학습서비스’는 형식적인 AI 적용이 아니라, 학습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학습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개인 맞춤형 피드백과 학습 성취 향상을 실제로 구현·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축되어야 함

□ 감사위원회 7건

1. 외부전문가 배치 기준의 명확화 및 분야별 운영 개선 필요
 - 외부 전문과 배치의 차이는 감사의 형평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 있음. 사안 중요도·위험도 기반 배치기준 마련, 분야별 외부인력풀 확대, 참여 실적 공개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균형성을 높일 필요 있음.
2. 서울시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 적발이 3년간 140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함에도 과태료 중심의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어 체계 개선이 필요함. 특히 소방직에 집중되는 임의취업의 구조적 원인과 시행령 개정 건의의 타당성(임의취업 양성화 우려) 등을 포함해 문제 전반을 재검토하고, 과태료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의무교육·자동알림·대상조회 등)를 구축할 것
3. 이태원 참사 이후 책임 규명과 징계 조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자치구 책임기관에 대한 후속 감사·조치가 미흡한 만큼, 감사위원회는 행안부 감사결과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 체계 마련
4. 투출기관 포함 감사범위·절차의 명확한 기준 설정
 - 투출기관의 범죄·비위 통보 여부 및 점검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감사 수행 근거가 혼재함. 투출기관 감사기능 확대 정책과 연계해 통보체계, 점검항목, 후속조치 기준을 표준화해야 함. 기관 간 책임 배분과 감사위원회 역할을 명확히 하는 지침이 필요함.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기관책임 체계 강화
 - 조사 증가 및 법원의 배상책임 확대 판례를 고려해, 감사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상시 모니터링·위험부서 특별점검 등 예방중심 체계를 강화해야 함. 행정국·인사부서와 협업해 개념 정의·조사절차·문서화·교육·사후관리 기준을 통합한 조직문화 개선 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음.
6. 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포함되는 사례가 있어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됨. 이에 위원 위촉 기준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 기준과 검증 체계를 보다 엄격히 적용할 것.
7. 부서·출연기관별로 제각각 처리되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업무로 민원·분쟁·감사 리스크가 반복되고 있음. 감사위원회와 재무국이 협력해 무단점유·변상금·사용료·협약 절차 등을 아우르는 통일된 표준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고, 현장 담당자가 감사 지적이거나 민원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8건

1. 운영방식 변화에 따른 효과성 평가 및 균형된 감시체계 구축 필요
 - ‘센터는 공공사업 중심의 참관을 강화했으나, 이는 감시영역의 편중을 초래하여 제도 본래의 ‘다분야 시민 감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향후에는 운영방식 변화의 효과 평가, 분야별 사각지대 점검 강화, 전문가 참여 확대, 온라인·사이버 기반 감시 도입 등으로 감시 영역 간 균형을 확보할 필요 있음.
2. 민원 처리 결과가 권고 수준에 머물고 갈등 해소가 충분하지 않으며 조사·권고 결과의 공개 및 사후 모니터링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후속조치 점검을 강화해 시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것
3. 홍보 체계 전면 개편 및 검수 절차 강화
 - 유지관리 업체와 내부 직원 간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고, 게시물 검수·업로드 절차를 표준화해야 함. 영상 제작 시 사전 검수제 도입, 품질 기준 설정, 연간 홍보계획 수립을 통해 반복 지적을 예방할 필요 있음. 필요 시 전문 인력을 부분 위탁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함.
4. 내 지역 지킴이 사업의 균형 운영 유도
 - 자치구 예산 편성 단계부터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 안내·워크숍·성과 공유회를 강화하고, 실적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와 저조 자치구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야 함. 주민 체감도 조사, 월별 모니터링 결과 공개 등 투명성 강화도 필요함.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누락·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단계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민원 재접수 시 다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보완할 것.
6. 직권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민원인이 내용에 동의하지 못해 장기간 갈등이 지속된 사례가 발생한 만큼, 민원 처리 이후 사후 피드백 절차를 정비하여 민원인의 이의 제기가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
7. 특정 민원 사례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정황이 제기된 만큼, 조사관 교육·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8. 장기간 이어지는 민원·분쟁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 유형에 따른 처리 프로세스와 사후관리 기준을 정비해 민원인의 신뢰를 높일 것.

□ 자치경찰위원회 11건

1.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전략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함
 - 권역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쉼테드 추진은 실효성이 떨어짐. 용산2가동 사례처럼 단독주택 밀집, 외부 침입 취약도, 야간 보행 동선 등 실제 위험 요인을 기반으로 한 정밀 설계가 필요함. 향후 사업 선정 단계에서 사전 현장조사 의무화, 주민 반응 반영 절차 강화 등 지역 맞춤형 기준을 도입할 것을 권고함.
2. 외국인 관광객 폭증 상황에서 관광경찰대 폐지는 서울 치안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조치임. 기존 기동순찰대 4개 대 중 1개 대를 전담 관광경찰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3. 지하철경찰대 인사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4. 자치경찰위원회의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관 활동이 요구됨. 경찰청, 중앙정부 등과 정책 협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협력 채널을 마련하기 바람
5. 러닝순찰대들이 달릴 수 있는 길이 한정되어 있고 주로 자전거길을 이용하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함. 고민을 해보시고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앞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기 바람
6. 대학생 순찰대 운영체계 재구조화 필요
 -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 실적 차등 지원, 전산화 도입, 활동 검증 체계 마련 등이 요구됨. 학점 인정 또는 장학금 연계가 일부 대학에서만 적용되고 있어 활성화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예산 규모(800만 원)가 과소해 실질적 운영이 어려운 만큼 예산 현실화, 앱 기반 활동 관리 등 사업 전면 재구조화를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 있음.
7. 대규모 행사 교통·안전관리 장비의 보완체계 구축
 -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별도 보조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 확인됨. CCTV·무전기 등 기존 수단은 있으나 현장 비상벨 등 즉각적 알림체계는 설치 빈도가 낮음. 다중운집 장소 중심으로 비상벨·센서 등 보조 장치를 검토해 돌발 상황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8.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도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입장이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 속도를 높이고 구체적 기여를 강화할 것.
9. 전국 위원장 협의회 및 연구용역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선도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성과지표 체계 개편안을 선제적으로 설계해 경찰청과 적극 협의할 것.
10. 경찰청이 추진 중인 자치경찰 평가 지표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평가 지표

간의 차이와 연계성을 명확히 파악해, 시민 체감성과 연계된 공통 기준을 검토할 것.

11. 한강경찰대 센터 이전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변화된 치안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임. 추진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분석하고 파악해서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8건

1. 새 브랜드명 '한마음 서울'과 캐릭터가 단순히 도입에 그치지 않도록, 서울시 기존 캐릭터처럼 활용이 부진한 사례를 반복하지 말고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세계관·아이템까지 연계하는 지속 가능하고 적극적인 캐릭터 활용 전략과 플랫폼을 마련할 것
2. 외국인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봉사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센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문화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홍보를 확대해 외국인 봉사자를 적극 발굴·확충할 것
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자원봉사 관리·발급 시스템이 중단된 사례를 감안하여, 유사 상황에서도 필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 대응 매뉴얼과 복구체계를 마련할 것
4. 고령 봉사자 맞춤형 복지형 보상체계 마련
 - 장기 봉사자의 연령·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체육·티켓 할인보다는 건강검진, 문화행사 초청, 휴식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형 보상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음. 고령 봉사자 특성을 반영한 인센티브 메뉴를 재설계해 봉사 지속 의욕을 높이고, 형식적 포상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5. 시·구 장기봉사 포상제도 중복 최소화
 - 시 자원봉사센터의 만 시간 인증과 25개 자치구 장기봉사 포상이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면서 동일 봉사시간을 시·구가 각각 검증·포상하는 행정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중복포상 방지 원칙, 정보공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 초중고등학교 자원봉사 의무교육 폐지에 따른 참여 감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자치구·학교와의 정례 협의를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
7. 새로 개발 중인 봉사교육 교재가 현장 적용 시 효과적일 수 있도록 완성 후 공유하고, 학교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
8. 코이카 연계 해외 자원봉사 사업은 국가 위상 및 K-컬처 확산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과 여건 범위 내에서 지속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마련할 것

□ 서울장학재단 7건

1. 교육청 특성화학교 장학금과의 중복검토 필요
 - 예체능 장학금과 교육청의 특성화학교 지원사업 간 대상·목적·지원항목 중복 가능성이 존재함. 분야별 학교 분포를 세밀히 조사하여 중복 방지 기준 마련·지원 분야 구조조정·심사기준 세분화가 필요함.
2. 장학생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봉사단을 다른 장학사업과 연계해 지속 운영 가능한 사회공헌형 장학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3. AI 분야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연구·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서울테크대학원의 장학금 지원을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
4. 서울 거주 기반 정착형 인재 전략 마련
 - AI 서울테크 장학생의 실제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여 정착형 인재 육성 취지와 어긋남. 주소지 이전 의무화, 서울 실거주 가산점 부여 등 정착 유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서울 산업 생태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 활동 관리도 요구됨.
5. 서울 선순환 인재 장학금의 질적 성과관리 강화
 - 멘토링의 사회적 파급력, 관계 지속성, 멘티의 후속 성장 등 질적 지표 도입이 필요함. 장학 종료 직후가 아닌 일정 기간 이후 만족도 재조사, 장기 추적 모니터링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함. 이를 통해 멘토-멘티 간 지속적 역량 순환 모델을 구축할 필요 있음.
6.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은 선발 목표(50명)를 거의 충족했음에도(49명) 2억 예산 중 9월 말 기준 집행액이 1억 미만에 불과함.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 개선
7. 서울테크스칼리십 장학사업 운영 현황 및 지원자 부족 사유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4건

1. 평생교육 이용권 지표 개편 및 프로그램 품질관리 강화 필요함
 - 현재 이용권 관리 지표가 '소진율' 중심이어서 실질적 학습 효과를 반영하지 못함. '지속률·만족도·학습성과' 중심의 지표로 개편 필요함. 또한 고령층 친화 프로그램 확대 및 기관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 있음.
2. 박사과정 전공을 역사·문화 분야로만 제한한 것은 운영 효율을 위한 과도한 축소로 보이므로, 자연과학·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를 검토할 것.
3. 평생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이 세대별로 다르게 인식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청소년·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가치와 목적을 명확히 정립할 것
4.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이 대상·성격 면에서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년층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정립할 것.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1건

1. 직원 대상 대관규정 재교육 및 캠퍼스별 관리 기준 통일 필요
 - 캠퍼스별 대관 승인 기준이 상이하고, 담당자 판단에 의존해 일관성 없는 승인 관행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상업·종교적 성격의 콘텐츠를 식별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따라서 전 직원 대상 정기 교육, 사례 기반 체크리스트 개발, 캠퍼스별 운영 기준의 통합 표준안 수립이 필요함. 또한 홍보성 콘텐츠·후원사 연계 행사에 대한 별도 금지 조항 강화도 검토해야 함.

다. 기타(자료요구 등) 40건

□ 비상기획관 1건

1. 방독면 확보 및 관리 기준의 정밀 재설정 필요
 - 현행 방독면 공급은 매칭사업 특성상 자치구 의지·예산에 따라 격차가 발생함. 이는 서울 전체 방호 역량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므로, 확보목표 상향·보관시설 확충·취약구 우선 지원 등 정밀 조정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는 확보율 편차를 최소화하는 균형적 관리 전략이 필요함.

□ 민생사법경찰국 2건

1. 대검·타 기관 협의사항 등 추진계획의 현실성 점검 필요
 - 바디캠·마약수사 등 다수 사안을 대검 협의 예정으로만 반복 기재하나, 실제 일정·책임부서·추진 단계가 불분명함. 향후 보고 시 “완료·진행·지연 사유”를 명확히 구분해 제출하고, 사전 검증된 일정계획을 기반으로 추진하도록 내부 점검체계 보완이 필요함.
2. 신종 전자담배·니코틴 제품의 접근성 사각지대 개선 필요
 -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에서 부모 신분증 등으로 인증을 우회하는 사례가 준재해 청소년 접근 차단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드러남. 또한 니코틴 젤리 등 신종 제품의 접근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위험이 급증하는 상황임. 이를 반영해 인증 보완, 판매장 관리 강화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행정국 6건

1. 근속장려금 사업의 정책취지 정렬 필요
 - 사업은 사각지대 보완과 지역 정착 지원 목적이거나, 통일부 제도보다 지원조건이 불리해 신청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속기록에서 지적됨. 중복수혜 차단과 사전안내 강화, 환수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정책 목적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2. 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업체명 등 기본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3. 본관 서측면 외부 마감재 교체 공사 관련
 - 입면도, 설계도, 감사위원회 결과보고서, 사업비 예산 증액 내부 검토 경위 문서
4. 구청장·부구청장 협의회 회의자료가 단순한 수준에 그쳐 실질적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구청장들이 서울시에 요청한 사항과 그 처리현황을 세부적으로 목록화해 제출하고, 서울시가 자치구에 전달한 사항들도 함께 포함한 보다 디테일한 자료를 제출할 것
5.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책임체계 정비
 - 관리 담당은 인력개발과이나 전담 책임자, 명확한 관리규정, 실적 점검체계가 부재해 관리 공백이 존재함.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점검 주기와 보고체계를 정비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함.
6. 서대문구의회 행정인력 현황 데이터가 실제와 다름. 자치구별 행정인력 현황 작성 시, 정원이 아닌 실제 배치·운용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변동사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할 것

□ 재무국 4건

1. 차기 금고 선정 과정은 재무국만의 사안이 아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체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공정하고 잡음없는 금고 선정 절차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음. 그럼에도, 금번 감사 과정에서 재무국의 답변 내용과 제출 자료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에는 미흡하였음.
2.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시의원 위촉 현황
3. 기존 업무보고 내용에서 업데이트만 하는 관행 탈피. 매출감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정책과 같이 상임위 위원들이 알아야 할 현안 사항이 부서 업무보고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쓸 것
4. 각 공유재산 임대 주관부서별 매출 감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 사업 안내 자료

□ 평생교육국 3건

1. 급식 위탁운영 중복비용 및 효율성 점검 필요함
 - 학교급식·든든급식 모두 동일 기관에서 처리함에도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은 개선 필요성이 있음. 인건비·시설비·물류비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외부 회계기관을 통한 비용 효율성 분석을 병행할 필요 있음. 중복구조 해소를 위한 프로세스 재설계가 권고됨.
2. 서울 든든급식 품질관리·만족도조사 방식 보완
 - 참여기관 중심 조사로 실제 만족도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반품·품질 민원은 낮으나 반복 품목 모니터링과 공급업체 평가 반영이 필요함. 비참여 어린이집 대상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해 정책 신뢰도를 높일 필요 있음.
3.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2024년 운영평가 점수 저조 사유

□ 인재개발원 2건

1. 대면교육 강의실 운영 및 공간 활용도 개선 필요
 - 다솜관 등 일부 시설의 사용률이 15% 수준으로 매우 낮음. 교육과정 재설계, 외부 활용 확대, 동아리·학습모임 수용 등 공간 재배치 전략이 필요함.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에 맞춘 운영구조 개편이 요구됨.
2.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 업체 선정 관련 자료

□ 감사위원회 3건

1.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의 ‘이코모스 영어 공문 해석 불가’ 등 업무 소홀에 대한 감사사항
2. 23년도 6월 아쿠아슬론 대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감사사항
3. 주요시책 점검 기능의 정의 및 조례 반영 필요
 - ‘주요 시책’ 용어 해석이 기관·조례·실무 간 상이해 행정감사에서 반복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주요시책 범위, 점검 방식,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해 향후 감사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시행규칙 개정 및 업무분장 재정비가 요구됨.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0건

□ 자치경찰위원회 4건

1. 제주도 등 타 지자체 SPO 운영 사례 분석 필요함
 - 제주도의 퇴직 경찰 기반 SPO 1교 1배치 모델은 긍정적 성과가 있으나, 자치경찰제 구조·재정 부담 등 차이가 존재함. 서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되, 고용 안정성, 교육 표준화, 예산 소요 등 실무적 쟁점을 분석한 후 중장기 도입 검토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2. 경찰청 연구개발사업 관련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여 동일·유사 방식의 확약서 발급·공모 참여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의 절차·법적 근거는 어땠는지 비교·조사 결과를 보고
3. 지하철경찰대 인력 감축에도 운용상 조치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운용상 어떻게 전환했는지 자료 제출 바람
4. 학교 주변 유괴·납치 등 안전 사각지대 점검 강화 필요
 - 아동·여성 대상 범죄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등·하교길 및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의 안전 사각지대 전면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 관련 부서는 학교·자치구와 협력한 현장점검 강화 및 재설계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4건

1. 한마음 서울 브랜드 및 캐릭터 내년도 활용 계획 제출
2. 자원 봉사 팝업스토어(‘아웃사이더’) 운영 결과 및 향후 확대·확장 계획 제출
3. 나진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수당, 회의록, 주요 업무 관련 자료 제출
4. 바로봉사단 자치구별 편차에 대한 현황 정비
 - 자치구별 협약기관·인원 분포에서 특정 구는 높은 수치, 일부 구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편차가 큼. 이는 재난 유형·인구·시설 분포와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각 구별 현황을 재정리해 편차를 완화하고, 취약 구의 네트워크 확충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장학재단 2건

1. 직원 퇴직 사유 및 인력구조 관리 필요
 - 올해 직원 3명이 퇴직했으며, 급격한 업무량 증가와 인력 부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인력운영계획이 요구됨. 현재는 일회성 대응에 머물러 있어 향후 조직 안정성 확보 방안 검토가 필요함.
2. 프로그램 운영의 실적 기반 관리 및 대학별 편차 점검
 - AI 장학, 선순환 장학 모두 대학·참여자별 운영 편차가 존재하나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지표가 부족함. 대학별 실적·참여율·만족도 기반의 차등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5건

1. 카드사 연동 부족으로 인한 사용내역 파악 한계 존재함
 - 농협카드 기반 결제 방식으로 인해 개별 사용액·사용기관·사용빈도 데이터가 완전하게 수집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정보 연계 미흡으로 정책분석·성과관리에도 제약이 존재함. 향후 카드사와의 데이터 연동, 시스템 통합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
2. 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 현황
3. 김미라 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수당, 회의록, 주요 업무 관련 자료 제출
4.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개요 및 사용기관 현황
5. 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증인 불출석 사유와 어떤 입장인 공식 문서 제출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4건

1. 중장년층 일자리 고도화 관련 협력체계 여부
2. 구직자의 경력 진단과 구인 기업의 미스매칭 시스템 구축 계획 여부
3. 외부강의 신고, 가족수당, 복무 부적정 적발 건에 대한 조치 결과 자료
4. 직장내 괴롭힘 관련 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자료